

第287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2月24日(水)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업무보고
  - 가. 환경부
  - 나. 기상청
  - 다. 노동부

審査된案件

- 1. 업무보고 ..... 1
  - 가. 환경부
  - 나. 기상청
  - 다. 노동부

(10시15분 개의)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 가. 환경부
- 나. 기상청
- 다. 노동부

○委員長 秋美愛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실시하는 환경부, 기상청 및 노동부의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속 정부기관들의 2010년도 1년간 업무집행계획 및 예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평가와 의견을 개진하여 정부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를 하는 환경부장관 및 기상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두 기관의 보고를 모두 청취하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두 기관은 오후 일정을 고려하여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만의 환경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존경하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 경인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가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국회에서 한국환경공단법 등 모두 8개 법률을 심의하여 제정·개정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2010년도 환경예산을 전년 대비 11.3% 증액 편성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등 환경 분야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는 한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수도권 대기 개선 특별대책 등을 통해서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보건법시행 등 분야별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녹색생활문화 확산, 폐자원 에너지 대책 수립, 생태관광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착실히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변화에는 여전히 주춤거리고 있고, 정부도 녹색성장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국민들이 녹색성장에 확신을 갖게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질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환경 안전을 강화하는 환경보건정책은 아직 기반 조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위기 극복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추진해야 될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환경부는 새로운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서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환경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환경·경제·사회가 융합된 녹색한국의 환경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금년도 환경부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4대강의 수질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4대강의 근원이 되는 셋강·실개천 살리기 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환경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 사업의 광역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고, 농어촌지역의 상·하수도 보급과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옥내 급수관 개량을 지원

함으로써 서민층의 물 복지를 향상시키며, 녹색길·완충녹지 등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저개발국의 환경역량 향상과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환경규제를 선진화하고, 음식문화의 친환경성을 제고함으로써 세계 속의 환경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환경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석면·나노물질·분진·라돈을 중점 관리하고, 어린이·노인 등 환경 민감 계층의 건강 피해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난해에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서 탄소 다이어트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즉 가정·건물·상업 등 부문별 녹색생활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통하여 국민적 실천운동을 전개하며,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즉 MRV체계를 구축하고, 목표관리제 도입 등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감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폐자원 에너지 대책 추진과 에너지 수종 식재 등 구체적인 감축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5대 선도지역 조성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새만금, 수도권매립지, 단양권, 창원권, 강릉지역이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성공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금년도 환경부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환경부 간부와 외청장 그리고 산하 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욱 차관을 소개 올려 드려야 합니다. 마는 현재 해외 출장 중입니다. 제11차 UNEP 특별집행이사회 그리고 세계환경장관포럼이 있어서 출장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문정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준석 환경정책실장입니다.  
 김지태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정연만 자연보전국장입니다.  
 백규석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윤종수 기후대기정책관입니다.  
 안문수 상하수도정책관입니다.  
 이정섭 녹색환경정책관입니다.  
 오종극 환경보건정책관입니다.  
 김진석 대변인입니다.  
 유복환 감사관입니다.

그리고 김찬우 국제협력관이 있습니다마는 차관과 함께 해외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여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외청장입니다.  
 전병성 기상청장입니다.

(외청장 인사)

다음은 소속기관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윤승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개성공업지구 환경관리업무협약 체결을 위해서 현재출장 중이므로 오늘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천 국립생물자원관장입니다.  
 이필재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다음은 산하기관장입니다.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엄홍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입니다.  
 김상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보직 변경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처음 갖는 국회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운 다짐을 하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차원에서 다 소개 올려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정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문정호 기획조정실장 문

정호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추진성과, 2010년 추진계획, 2010년 입법계획과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앞의 일반현황과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같음하고 29페이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4대강 창출입니다.

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인공 생태습지 84곳과 어도 33곳을 조성하고 멸종 위기종에 대한 인공증식·방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수처리시설의 총인 화학적 처리시설을 1조 3000억 원을 투자하여 보장하고, 수질 변화와 오염원을 연계해서 상시 분석·평가·예보할 수 있는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를 금년 중에 과학원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설립한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인력을 120명으로 확충하고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취수시설 24개소는 공사 전에 이전, 개·보수를 완료하고 영향평가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기존에 운영 중인 환경평가단을 사후관리조사단으로 개편 완료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4대강 사업 공구별로 특화된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4대강 외의 국가하천과 지류·지천에 대한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 대책도 수립·추진을 하겠습니다.

셋강·실개천의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는 생태하천복원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훼손된 지방하천 109개소를 우선적으로 복원하겠습니다.

청계천+20사업 중에서는 대전천을 금년 중에 완공하고 약사천 등 9개소를 금년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도랑과 실개천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기업 NGO 등과 함께 1사 1하천 복원운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미지의 유해물질까지 관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내년 중에 시행하기 위해서 기반 구축을 완료토록 하고, 보설치에 맞춰서 하천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BOD에서 COD로 전환하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중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확대를 위해서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는 내년부터, 한강 수계는 의무제 전환 시점부터 총인에 대해서 총량제를 확대하고, 4대강 살리기로 변화된 수리·수문 특성과 화학적 처리 등을 고려해서 기준유량과 목표수질을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수도 사업의 광역화 등을 통해서 지역 간 물이동을 촉진하고, 경영 효율을 개선하고자 전남권·경북권·강원남부권 통합운영 시범 사업을 금년 중에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체계적 상수관망 정비로 유수율을 2014년까지 82.6%로 제고해 나가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을 통해서 빗물 등을 효율적으로 재이용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업종별·제품별 물 사용량 정보 공개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수돗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낙동강 취수체계 다변화를 위해서 강변여과수 3개소를 개발하겠습니다.

취약지역·서민층의 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보급률을 각각 2013년까지 72%, 68%로 제고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옥내급수관 개량 및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을 무상지원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기능 확대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를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종합환경처리센터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12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해서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관리 강화를 위해서 토양과 지하수 수질을 통합 연계·관리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조기정화 및 청정부지 개발 절차를 법제화하겠습니다.

또한 오염토양을 반입·정화한 후에 필요한 곳으로 공급하는 토양은행단지 조성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연자원 보전과 현명한 이용입니다.

도시 녹지·친수공간 확충을 위해서 생태면적을 적용을 확대하고, 공장지역과 주거지역 간의 공기질과 악취 완충녹지 조성사업 6개소를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투리땅에 녹화운동 전개와 소규모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서 도심의 소생태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강화와 현명한 이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질공원제도를 도입하고, 광역생태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국립공원 생태계 복원 종합대책 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또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금년 중에 국립공원구역을 조정하고, DMZ 생태계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도 수립해서 생태·평화관광명소로 브랜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을 선정하고, 자연환경 이용시설 확충 등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상품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국립공원을 생태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U-생태관광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생물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생물자원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기본법 제정, 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생동식물 유전자은행 설치 등을 통해 BT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의 기상 분야에 대해서는 기상청의 별도 보고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0페이지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입니다.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음식쓰레기 수거를 무상·정액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개편하고, 수거 수수료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한식문화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찬 수를 최적화한 고품격 메뉴·식단을 개발·보급하고, 소형·복합찬기 보급으로 잔반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식자재 규격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농수산물 규격화·포장화, 저온·반가공상태 유통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속 실천운동으로 '빈 그릇 희망운동'도 전

개해 나가겠습니다.

폐자원 순환을 통한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단위 폐자원 순환망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확대,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기관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폐자원에너지화를 위해서 가연성·유기성 에너지화시설 확충 등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폐금속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휴대폰 상시수거체계를 구축하고, 2012년 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 예정으로 대량 폐기가 예상되는 브라운관TV의 재활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생활환경 개선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폐기물관리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종량제봉투와 중고가구 무상지원, 나눔장터 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청소행정 효율화와 유해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 대행비용의 원가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를 계기로 한 환경선진국 도약입니다.

먼저 WCC총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서 2012년 제주도-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총회 개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한국방문의 해와 여수엑스포 등과 연계한 생태관광 유치 활성화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산과 환경보전 노력을 국제적인 브랜드로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 등 환경프로그램과 인프라에 대한 집중지원도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의 국격 향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3월 중에 마련하고, 4월 중에는 환경 분야 국격지표도 개발하겠습니다.

44페이지, 환경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는 감축행동 등록부 제안을 구체화하는 등 기후변화 코펜하겐 후속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4월에 개최되는 제4차 B4E와 10월에 개최되는 제32차 IPCC총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2년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환경상품·서비스 교역 확대와 국내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FTA 등 환경 분야 협상력을 제고하고, 국제기구와의 환경 협력과 지역 및 양자 환경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규제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총량제를 전제로 공장 입지규제를 면적 기준에서 부하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대기 배출과 관련해서도 계획관리지역에서 배출총량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수·합병 시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술발전 속도를 반영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업종별로 합리화하고, 인·허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서 재인·허가 하는 새로운 인·허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 배출기준의 70%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삭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역부과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환경평가제도의 합리화와 사후관리 강화도 병행 추진을 해서 스크리닝제도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에 제공하는 정보제공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서 한국형 REACH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량 전면공개를 하겠습니다.

또한 발암물질을 중심으로 위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폐기물부담금 제도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일곱 번째로 저개발국 환경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우리의 앞선 환경정책 경험·기술을 전파해서 국내 환경산업 수출의 지렛대로 활용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고 또한 국제공동 환경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사업과 수요자 맞춤형 초청교육,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 지원규모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2011년부터 추진하는 Eco-Innovation 기술개발사업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개발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Test-Bed를 구축하는 한편 환경산업체에 지원센터 건립 또 개발기술의 현장 적용 촉진을 위한 국책사업 환경기술·산업지원단 구성, 환경산업체의 육성을 위한 전문투자자금 조성 등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녹색정보공개제도 도입과 녹색기업지정제도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국민건강 위해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아파라(ANAPARA)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석면과 관련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과 안전관리법을 제정해서 석면대책의 법적 기반을 완비하고, 농어촌 노후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와 처리 지원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나노물질과 관련해서는 인벤토리를 2012년까지 구축하고, 관련부처·전문가와 안전성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분진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PM<sub>2.5</sub> 대기질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시멘트공장 등에 대한 주민건강조사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금년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라돈과 관련해서는 전국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라돈 차폐시공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어린이용품 위해물질 함유실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위해 어린이용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해물질의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업종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놀이터나 보육시설·유치원에 대한 친환경적인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환경보건생활지침과 환경보건지표를 금년 중에 개발하고, 아토피 에코케어센터를 진안과 보성에 건립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새집·헌집증후군 제거를 위한 실내환경 개선사업으로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포름알데히드 등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위해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보건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제3차 유해화학물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영향평가제도도 시행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수은과 카드뮴 등에 대한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신규 대상물질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환경 위해요인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숲가마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빗공해방지법 제정도 금년 중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의 탄소다이어트 2030 추진입니다.

먼저 Me First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가정 부문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를 본격 추진하고, 녹색가정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건물 부문에서는 공공건물에 대한 환경성인증 의무화와 환경성인증 건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업 부문에서는 탄소성적표지제도를 확대하고, 그린스토어 인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교통 부문에서는 천연가스차와 하이브리드차·공회전제한장치 등을 보급 확대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인프라 실증사업과 시범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생활 홍보·교육을 강화해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해 나가고, 그린리더 육성과 차세대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녹색시민 양성 또 환경교육인증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는 금년도에 작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하는 등 탄소다이어트 2030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서 배출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녹색성장 지표·지수를 금년 6월까지 개발하는 한편 1km의

해상도 태양광 에너지 자원지도를 연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중기감축목표 실행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단계별·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본격 도입을 위한 법령 제정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련해서는 규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 단계부터 온실가스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감시·적응 기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본격화를 위해서 수변구역 매입토지 등에 에너지 수종을 식재하고 탄소흡수원과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상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자립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의 동시저감을 위해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NOx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총량관리제 적용대상을 2종 사업장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건설 및 농어업기계용 원동기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규제대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 조성입니다.

먼저 새만금 지역을 녹색명품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21%에 해당하는 생태환경용지에 대해서 권역별 조성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생태복원·관광 마스터플랜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 수립된 수질개선대책을 보완하겠습니다.

상류지역 하천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유역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

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를 세계 최고 환경명소로 브랜드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세계최대인 스페인의 에코파크의 10.8배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도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모델 창출을 목표로 세계최대의 매립가스발전소에 대한 CDM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에너지대학원 대학을 설립하고 반입폐자원을 이용한 CO<sub>2</sub> 고정·자원화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기술개발코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환경관광명소로 브랜드화해 가기 위해서 입지적인 이점과 유희부지, 주변시설 등을 활용한 레포츠·바이오·생태공원 조성 등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단양권에 대해서는 폐자원 순환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그 지역 수요에 맞춰 자원화하는 지역특화 폐자원 순환망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원권에 대해서는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습지센터 조성과 따오기 복원 등을 통해서 우포늪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또한 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의 경험을 토대로 환경분야에 특화된 에코 컨벤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시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중에 녹색도시 세부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녹색교통과 신재생에너지, 물재이용, 도시경관의 녹색디자인 등을 본사업으로 2010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도시의 녹색화 표준모델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2010년도 입법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6건의 법률을 제정 내지는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과제별로는 국정과제 관련된 것이 1건, 법률 선진화를 위한 유사법률의 통·폐합이 1건, 규제 개혁 선진화 과제가 24건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의 이번 임시국회에 지금 저희가 희망하고 있는, 계류돼 있는 총 181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해 주실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먼저 4대강 살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준설 퇴적토의 중금속 오염문제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대책을 보고드리면 환경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서 준설 시에 매 2~5km마다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준설토 활용 시에는 2차적인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서 4대강 성토지역 토양 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에 따라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토양오염을 처리한 후에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식수 영향과 관련해서는 취·정수장에서 원수의 측정주기를 강화하고 탁도농도를 수도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수질영향과 관련해서는 1보 1측정망 운영 등 하천 내 중금속 측정망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의 단양 축부쟁이 등 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강에 강천보 설치가 되고 있는 6공구 내에 멸종 위기종인 단양 축부쟁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라는 공사로 인해서 서식지의 부분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셋강 조성 구간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원형 보전토록 하고 영향이 예상되는 단양 축부쟁이는 강천리 섬 내에 금년 4월까지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서 이식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탁도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4대강 살리기 공사 중에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측정망 외에 이동형 측정장비 8개를 추가하고 또 공사현장 하단부와 주요 취수장 인근에 자동 측정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방제센터 인력을 확충하였고, 지방유역환경청별로 상시 감독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방제교육과 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강 등 4대강 수계 수질개선과 관련된 사항입

니다.

최근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BOD는 지금 유지 내지는 개선추세가 있습니다마는 COD의 경우에는 지금 정체 내지 악화추세에 있고 특히 팔당 하류지역에 대장균이 증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COD 개선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과 병행해서 34개 중점관리유역에 총인에 대한 물리화학적 처리를 보강을 하고 하·폐수 처리장에 대한 COD 방류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점오염과 가축분뇨에 대한 저감대책도 추진을 해 나갑니다.

대장균 저감과 관련해서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대장균 방류기준을 강화하고 잠실 상수원의 주요 오염원인 왕숙천 유역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엄격한 정수처리 유지·관리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환경성과지수 발표와 향후 대책 관련입니다.

최근에 세계경제포럼을 통해서 EPI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2008년과 비교해서 43단계가 하락한 94위로 평가됐습니다. 그간 관계부처와 전문기관 등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평가가 대부분 활용된 자료가 2000년대 초반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 평가항목의 변화라든지 평가항목별 데이터 확보의 부족, 전문가 검토과정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EPI가 객관적 지수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 하락의 원인 분석을 해 봤을 때에는 기후 변화나 대기 오염 등에서 상당히 많은……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제고대책을 수립하고 부처 내지는 부서별 책임기관을 지정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 하였습니다.

또한 EPI 평가기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평가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최신 자료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전면 공개입니다.

2000년부터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해서 지역별·물질별·업종별로 배출량을 공



개를 해 왔고, 200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사업장별 배출량을 공개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량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업종 등에서는 배출량 공개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76페이지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이러한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화학물질 위해정보소통에 대한 시스템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개제도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취지 설명을 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정보교류회 등을 통해서 기업의 배출저감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성 기상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전병성** 예, 기상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상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기상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9.9% 증액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설, 가뭄,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상이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서 국가적인 대책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기상예보 정확도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과 기상정보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상청은 2010년도 기상정책 목표를 선진 예보 구현과 기후 변화 대응 능력 제고로 정하고 기상예보 선진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개 주요 기상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기상예보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보정확도를 향상하고 국민 만족도를 증진시켜 신뢰받는 기상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기후변화과학 분야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능력을 향상시켜 상세 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정부적 기후 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셋째, 지난해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을 기반으로 기상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해상도 기상자원지도 제공하고 기상 조절 기술연구 강화로 실질적인 녹색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로, 안개·낙뢰 등 새로운 위험기상에 대한 대비능력을 강화하고 태풍과 황사의 예측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해양기상서비스 강화로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최우선 시 하겠습니다.

다섯째, 통신해양기상위성의 성공적 발사와 운영, 레이더운영센터 설립, 관측시설 첨단화 등 기상행정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기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보역량을 향상시켜 기상업무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도말씀을 잘 새겨 향후 기상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기상청과 산하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청 주요 간부입니다.

홍윤 차장은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제15차 WMO 기후위원회 총회 참가로 인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켄 크로포드 기상선진화추진단장입니다.

이일수 기획조정관입니다.

진기범 예보국장입니다.

엄원근 관측기반국장입니다.

박정규 기후과학국장입니다.

박광준 기상산업정보화국장입니다.

이현 지진관리관입니다.

조하만 국립기상연구소장입니다.

서애숙 국가기상위성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산하기관장입니다.

김병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입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정책 추진성과 평가, 2010년 기상정책 실천계획, 2010년 입법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연혁과 조직 및 정원, 주요 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고 6쪽 예산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상예산의 주요 특징은 관측망 고도화 그리고 예보역량 강화와 대국민서비스 개선,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기반시설 등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09년 대비 8.3%가 증액된 2425억 원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가 금년도 4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국립기상연구소 제주도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관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의 2009년도 정책추진성과 평가 중에서는 주요 성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의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 기상청은 역대 최고의 예보정확도 제공으로 고객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오늘·내일 단기예보 정확도가 일본보다 6% 이상 높은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대국민 기상예보 서비스 만족도는 67.4%로 전년 대비 7.9%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에 위험기상 사전 대비를 위한 선행시간 확보입니다.

태풍 진로 정확도는 미국·일본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적으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호우특보 선행시간은 2시간 28분으로 전년 대비 53분 이상이 확보됐습니다.

11쪽입니다.

장기예보 정확도가 향상됐습니다.

1개월 예보 정확도는 42.6% 수준으로 전년도 41.7%에 비해서 0.9%p가 상승하였습니다.

수치예보 기술력은 세계 9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전지구 통합모델 예측성능이 현업 모델 대비 약 18%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2쪽입니다.

지진통보 신속도는 5분 이내 수준입니다. 지난해 평균 통보속도는 3.92분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격차가 큼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기상시장 규모는 124억 원이 증가된 443억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기상관측표준화율은 41%를 달성했고 2012년까지는 100%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 추진전략별 내용과 성과 등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1쪽 금년도 주요정책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 기상정책 실천계획입니다.

22쪽 되겠습니다.

기상정책 목표와 추진체계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기상예보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과학정보 지원 확대, 기상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위험기상 대비능력을 강화하며 기상행정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23쪽 기상예보 선진화 지속 추진입니다.

우선,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예보 선진화 기반 구축, 실시간 예보 검증과 평가정보 환류 또 초단기에서 주간예보까지 빈틈없는 고객 지향 예보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측망 확대, 첨단화, 수치예보모델 성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4쪽, 금년도 주요 추진 내용은 우선 통합수치예보모델 운영과 기후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3호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컴 3호기 기반 전 지구·지역 통합 수치예보 시스템을 5월부터 현업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보 능력 강화를 위해서 예보 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 예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웹기반 실시간 예·특보 검증·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단기 예보에 접목해서 주간예보기술 개발 등 동네예보를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적으로 기상재해를 담당하는 해양분야 등 재해기상 전문예보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상 관측망 보강과 첨단화입니다.

연근해 파고부이 설치 및 해양기상 관측선 건조를 완료하고, 기상관서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동기상관측소 설립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기상관측자료 생산 지원을 위한 첨단 관측 시스템을 채용하고 시정, 적설, 운량, 운고, 증발량 등 수동관측과 목측요소 자동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국민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금년에는 출퇴근 시간, 방송과 언론보도 시간을 중심으로 날씨 변화 시나리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말 예보와 산악기상정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상방송 등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채널 통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선진화 10대 과제 실행입니다.

10대 과제는 크로포드 단장 부임 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측 분야에서는 레이더 자료의 국가적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예보 분야에서는 실황 예보 프로그램 설계와 미래 예보관 역할 재정립, 예보관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기후 분야에서는 국가기후자료센터 구축, 서비스 분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기상정보 전달 체계 구축 그리고 국제 협력에서는 국가별 특화된 기상기술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레이더운영센터를 신설해서 범정부레이더운영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레이더 분석 능력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세대 지상기상관측장비를 설계하고, 예보관 훈련 시스템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시연판을 제작하겠습니다.

국가 통합 기후·수문 자료 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선진국 수준의 해양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후변화과학정보 지원 확대입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 국가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기후변화 적응 분야 활용을 위해서 한반도 상세 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한반도의 과거 재해지도 작성, 향후 전망지도 개발 등 수요자 중심 정보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맞춤형 농림기상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수문·기상 발전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IPCC 총회가 금년 10월에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고, APCC의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서 기후변화와 미래포럼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예측 능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극지 기후변화감시소를 지정 추진하고, 기후변화 감시와 관련된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 제2차 동아시아 기후변화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미래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기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선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공감대와 기반 구축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상산업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활성화시키고, 맞춤형 기상콘텐츠를 개발하고, 개도국에 대한 기상기술 전수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청의 홈페이지·전화·메일 등을 통해 고객과 기상사업자를 연계하도록 하고, 각 시·도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하도록 순회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상장비 도입·유지 보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 수행하도록 하고, 생활과 산업기상지수 예보지역을 확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상예측, 재해예방 등 개도국 녹색성장 역량 강화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 대한 협력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녹색성장 기상자원 기술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기후자원의 녹색에너지 지원 기술을 개발하고, 대규모 국토 개발에 따른 고해상도 기상영향평가 기술을 개발하며, 인공강우 실험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위험기상 대비능력 강화입니다.

새로운 위험기상 대비 강화를 위해서 안개특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특보에 관련해서는 강성천 의원님께서 2월 8일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해 주셔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공청회에서 개진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특보 준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낙뢰 정보 서비스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5쪽, 태풍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입니다.

금년에는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에 대한 감시·분석·예보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예측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현재 태풍예측을 3일 예보로 하고 있습니다만 5일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태풍센터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제43차 태풍위원회 총회를 내년 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황사 감시와 예측 능력 향상입니다.

우선, 국내외 황사 감시망을 운영·확충하고 미세먼지 크기의 분포 등 황사, 연무의 물리적 특성 분석을 위해서 서울황사감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황사모델 개선을 통한 중단기 황사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고, 황사 공동대응을 위해서 몽골, 중국, 일본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지진 분석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조기경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속도관측소 30km, 가속도관측소 20km 평균 이격거리 유지를 위해서 고밀도·고품격의 조기경보 관측망을 구성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의, 특히 일본과 중국의 지진 관측 자료 수신을 확대해서 주변국에서 일어나는 지진도 신속히 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해양기상 서비스 강화입니다.

육상에 비해서 그동안 해양기상 서비스가 미진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양사고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서 연안방재 관측시설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에 제공하는 영역기상방송을 개선해서 통신소 무인화 용역연구 수행과 음성정보 시험방송, 방송용 해양정보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근해 선박기상정보를 매일 발표해서 해상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기상행정 인프라 확충입니다.

기상관측 표준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생략을 하고, 40쪽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측시설의 표준화 등급 60%를 달성하도록 하

겠습니다. 기상청의 경우는 금년에 80%, 다른 기관은 60% 달성하도록 하고 주변 환경, 관측 장소 환경, 측기 설치 환경 등 기상청 관측시설도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북, 경기, 경북, 제주도 등 표준화 시범 기상관측시설 4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측시설 약 500개 지점에 대한 관측환경변화와 이력 등을 조사·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레이더센터 운영입니다.

레이더는 폭설이나 폭우 등 단기적 이상기상 예측에 아주 유용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레이더 첨단화·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레이더 전문인력 양성 또 레이더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백령도의 경우는 고성능 이중편파 S-Band 레이더를 도입해서 기상예측이 좀 더 정확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범정부레이더운영실무위원회도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기상위성 활용입니다.

통신해양기상위성이 금년 4월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성이 발사되면 위성 발사에 따른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분석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후속 위성 확보도 아울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성에 수신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동남아 개도국과 공유하도록 협력사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의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그린 IT 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스마트폰 활용 등 모바일 오피스 근무환경 구축·운영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사물통신망 도입, IP-USN통합관측시스템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효율적 기상 R&D 조직 구성입니다.

현재 국립기상연구소가 70명 수준으로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국립기상연구소를 국립기상과학원으로의 확대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후, 기상 등 연구를 좀 더 밀도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지원 부탁드립니다.

45쪽, 2010년 입법계획입니다.

기상법 일부를 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보시면 우선 우주기상 문제, 규제 합리화 또 지진 분야에 대한 보강, 기후센터에 대한 법

적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48쪽의 초단기 예보 정확도 향상입니다.

초단기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레이더 자료의 공동 활용과 실황강수 예측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이더 자료를 바탕으로 초단기 예보시스템을 개발해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폭설이나 폭우, 이러한 이상기상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고 또한 전문예보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분야 국격 제고 프로젝트입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베트남의 홍강·메콩강 수문 감시와 예측 시스템 구축을 공동으로 하도록 베트남과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인도 기상청과 선진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기상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기후예측 역량 배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우주기상 예·경보입니다.

인류 활동이 우주공간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우주기상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주기상 업무에 수행되는 제도적 기반과 협력 체계를 금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법 개정과 병행해서 우주기상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우주기상 감시용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기상 관측자료 수집 시스템 구축 그리고 분석기술을 개발해서 단계적으로 선진국에 준하는 우주기상이 예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방법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씩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강성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성천 위원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환경부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한 해라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이 1980년 1월에 발족하였으니까 올해로 30년이 되는 해이고, 환경부가 장관급 부처인 환경처로 승격된 지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고 봅니다. 조직이나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책의 범위에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와 B4E 회의 개최 결정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우리나라에 집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올해는 국제사회와의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환경 협력 및 교류를 더욱 촉진하여 환경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장관님, 어떤 각오로 금년에 임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의 역사 그리고 우리 국가의 선진화 단계에서 필요한 정책의 선진화 그리고 환경부가 국제 협력 차원에서 이제는 많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금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경기도 성남·광주·하남 등 3개 시 통합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강성천 위원 통합 성남·광주·하남시는 서울보다 큰 면적으로 향후 수도권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이미 광주·성남·하남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적으로는 큼니다. 특히 대기 분야에서는 크고 또 앞으로 수도권의 큰 도시로 다시 탄생을 하게 되면 상호 경제·사회적 교류 폭이 늘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강성천 위원 통합시 중 광주시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65%로 가장 넓고 경기도 대기오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아황산가스 등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광주시가 가장 높습니다. 그중 미세먼지는 전년도 대비 성남은 8%, 하남은 2%가 감소하고, 광주시는 23%가 증가했습니다. 장관님, 이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강성천 위원 장관님, 성남·하남시보다 대기 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시의 대기오염이

오히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광주시를 대기 관리권역에 포함시키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동안에도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오염물질의 배출 밀도가 높지 않은데 왜 이렇게 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가 하는 것이 아무래도 지역 여건 때문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관리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은 무엇보다 이번 사안에 대한 환경부와 광주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지금까지 단일 행정구역 단위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통합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대기 상호관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검토를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를 해 보고 또 저희 수도권 대기관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지자체 통합에 있어서 환경 행정 문제로 인한 혼란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은 무엇인지, 언제 수립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하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형 가전제품에 관한 배출 수수료 면제의 실효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진척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대형 가전제품을 보다 많이 재이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출 수수료의 면제를 포함한 조정 방안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강성천 위원** 전자제품에 포함된 폐금속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부는 작년9월에 폐금속 자원 재활용 대책을 발표했구요.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폐금속 자원의 재활용 재개를 강

화하기 위해서 EPR 의무 대상 품목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확대되는 EPR의 의무 대상 품목이 결정되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아직 관련된 조사하고 연구 그리고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병행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금년 중에 대상 품목을 확정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의무대상 품목의 확대를 위한 관련 연구용역은 아직 준비 중이고 올 연말에야 연구용역이 끝난다고 하는데 맞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연말에 연구용역이 종료된다면 EPR 의무 대상 확대는 연내 실행이 불가능하겠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연중 시행을 하려고 해도 그 용역 결과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금년은 어렵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예, 그렇지요.

결국 폐금속 자원 재활용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장관님 이 문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대책 추진에 필요한 기반조치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만 발표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볼 수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존경하는 위원님 견해와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3월 초에 세부 추진 계획을 빨리 마무리하자고 지금 촉구를 하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재활용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폐금속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관심 끌기에 급급한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천과 신뢰가 없는 정책은 성공할 수도 없고요. 장관님이 점 명심하시고 정책 추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꼼꼼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기상청장님!

○**기상청장 전병성** 예.

○강성천 위원 요즘 국민들이 지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상청장 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지진에 대한 관측, 감시, 통보가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상청장 전병성 예, 현재 전국에 110개소의 지진관측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2.0 이상 되는 모든 지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결과를 관계기관하고 언론사에 통보를 해서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최근에 경기도 시흥 지역 등 수도권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지요?

○기상청장 전병성 예.

○강성천 위원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 국회에 그때 제가 있었는데 이 국회에서 광하는 소리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원님들이 다 놀라고 그랬거든요.

기상청 기록으로 올해 들어 국내에서 몇 번 지진이 발생했습니까?

○기상청장 전병성 규모 2.0 이상이 금년에 열 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흥에서 나온 3.0 이상 규모가 세 번 발생했습니다.

○강성천 위원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지요?

○기상청장 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진설계를 통해서 지진의 진동으로부터 빌딩이나 댐 등이 무너지는 1차적인 피해를 줄이는 방법과 신속한 지진 통보로 가스, 지하철 등이 파괴되며 발생하는 2차적인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지요?

○기상청장 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히 국민에게 알려야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 전병성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 기상청에서는 속보는 2분 이내, 통보는 5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까지는 50초 이내로 단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이후로 10초 이내까지 단축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20초 이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과는

2분에서 5분이면 우리나라 전역을 통과해서 전국을 지진 피해의 영향권에 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상청장 전병성 예, 맞습니다.

○강성천 위원 현재 지진이 발생한 뒤 5분이 지나서야 지진 통보가 되는 것도 맞지요?

○기상청장 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우리나라에 큰 지진, 규모 5.0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지진 통보 시간으로 지진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기상청장 전병성 지금 지진 S파가 초당 4km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이면 480km가 전파되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보 시간으로는 대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더 이것을 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진 통보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합니까?

○기상청장 전병성 저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천 위원 40초 이내라고, 이내가 가장 좋은 시간이지요?

○기상청장 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기상청에서는 지진 통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통보 시간을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겠다고 했는데 준비 중인 게 맞습니까?

○기상청장 전병성 예, 저희들이 국가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기본계획을 작년 8월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측장비나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까지는 50초, 20년까지는 10초 이내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청장님,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진조기경보체제를 보다 빨리 구축할 수 있지요?

○기상청장 전병성 예.

○강성천 위원 지금부터 준비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기상청장 전병성 조금 더 단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15년까지 50초를 잡고 있고 20년 10초인데 최대한 단축을 해서 불의의 지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제 지진은 먼 나라 얘기가 아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피해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인 지금 이 시점에 이 점 항상 기상청은 유념해서 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전병성** 예.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박대해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대해 위원** 박대해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1월 27일에 부산 하얏리아 미군 기지의 관리권 이양이 부산시로 돌아왔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미군이 1950년 9월 이 땅을 점유한 이후 59년 만에 이 부지가 부산시민들 품으로 돌아온 아주 정말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환경오염조사 등 부지 반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역사적인 반환 순간을 위해 애를 많이 쓰신 우리 이만의 환경부장관님과 또 특히 전·현직 토양지하수과장, 우리 백운석 과장과 정은해 과장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여러 번 이것을 이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금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본 위원도 이 하얏리아 부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해야 되겠다, 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얏리아 부지는 오염 규모가 전체의 0.26%, 정화 비용은 3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미 간 힘겨루기로 기약 없이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부산시민의 염원을 받들고 또 쾌적한 시민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기 반환된 것은 참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얏리아 반환은 선례 불구성 또 JEAP 지속 적용이라는 명백한 조건이 달려 있기는 합니다만 2017년까지 반환 예정인 33개 미군기지의 오염 조사와 치유 방식이나 비용 산출에 포괄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국내 최초로 도입된 위해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보

고서에 많은 국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위해성 평가 자료는 국회법에 의해 어차피 국회에 제출이 되어야 할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박대해 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SOFA하고 합의서, JEAP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한미 간에 합의를 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SOFA합동위원회의 주관 부처인 외교부장관에게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금년 2월 1일자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미측에 2월 10일자로 공문을 보내서 그 뜻이 전달된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빨리 공개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대략 언제쯤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대략 지금 추정하기에?

○**환경부장관 이만의** 현재 외교부하고 계속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 다음 국회를 열 때는 가능하면 공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환경부라든지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 아주 큰일 하셨는데 지금 이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으니 부산시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아주 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나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공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빨리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료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다음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전체적으로 평균해 보면 약 6%에서 7% 사이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그래요? 지금 한 육칠%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여주 남한강의 강천보에서 탁수 유출과 또 대구 달성보와 창녕 함안보에서 퇴적토 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사 중지를 요구해 온 게 있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특히 달성보 퇴적토에서 검출된 비소의 양이 kg당 8.488mg이므로 미국 해양대기청의 퇴적물 기준 8.2mg을 초과하기 때문에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정화 처리해야 한다고 그런 주장이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박대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에서 제시한 미국 해양대기청의 퇴적물 기준은 수생생물 영향을 평가하는 참고 기준일 뿐 퇴적물 오염도를 판단하거나 정화 또는 처리를 위한 법적 기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미국에서 실제로 그러한 정책자료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박대해 위원** 그렇다면 미국 해양대기청도 이 기준을 퇴적물 오염도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박대해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퇴적물 관리기준을 마련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국가 단위로는 네덜란드 하나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네덜란드 하나가 있어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박대해 위원** 법적 구속력을 가진 네덜란드의 퇴적물 관리기준은 얼마입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경우에 지금 8.4mg이 나왔는데 네덜란드의 기준에 의하면 55mg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그러면 툴립의 나라 네덜란드에서도 55인데 우리나라가 8.4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는 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퇴적토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중단

해야 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박대해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발생한 대구 달성보 퇴적토에서 비소가 검출된 문제를 보면서 철저한 근거 자료와 과학적 분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퇴적물 시험 방법 및 기준조차 수립해 놓지 않은 환경부도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환경과학원에서 퇴적물 시험 방법 및 기준 마련을 위해 조사 연구 중이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박대해 위원** 이 퇴적물 기준은 언제쯤 제정이 될 계획입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원래는 2015년까지 이것을 만들어 낼 계획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 자체가 2011년까지 모든 게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국립환경과학원 용역사업도 2011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2012년도에 전문가 의견을 다시 한 번 거치고 또 수립하도록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하천과 수자원·수질 관리에 민감한 국가에서는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기준은 진즉 수립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퇴적물 시험 방법 및 기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각종 중금속 오염 우려에 대해서도 사업 구간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시간이 없어서, 기상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기상청장 전병성** 예.

○**박대해 위원** 지난 1월 4일, 2010년 새해 첫날 출근을 앞둔 새벽 수도권 지역에 눈폭탄이 터진 날입니다. 기억을 하시지요?

○**기상청장 전병성** 예.

○**박대해 위원** 그날 본 위원은 서울에서 생전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린 것을 처음 봤습니다. 눈 구경을 못 해 본 부산 사람이라서 그런지 신기하

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청장님, 갑자기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상청장 전병성** 당시에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발생해서 수증기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눈은……

○**박대해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전병성** 예, 다른 눈과 좀…… 특색이 있는데 보통 강수 1mm당 눈 1.2cm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1.8cm가 만들어졌습니다.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같은 강수량이 두꺼운 눈으로 변해서 많은 눈이 됐고……

○**박대해 위원** 예, 좋습니다.

○**기상청장 전병성** 다년간에 많은 눈이라고……

○**박대해 위원** 답변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기상청장 전병성** 예, 교통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대해 위원** 기상청은 1월 3일 오후 예보를 통해서 4일 강원 산지에 5~20cm, 서울, 경기, 충남·북, 강원예 적게는 2~7cm, 많은 곳은 10cm 이상 눈이 내리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기상청장 전병성** 예.

○**박대해 위원** 그러나 실제로 서울에는 1937년 적설 관측 이래 최대인 25.8cm가 쌓이는 등 수도권 중심으로 기상청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아마 그날 기상청에 항의 전화와 홈페이지에 비난 글이 많이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여름에 6주 연속 오보라는 불명예 진기록을 세우면서 ‘오보청’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는데 전병성 청장 부임 이후에 아주 예보가 정확해졌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칭찬하고 했는데, 이번엔 눈 예보하는 것 보니까 또 옛날 그대로예요.

이 칭찬이 아주 잘못됐다, 너무 칭찬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 눈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비는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만 눈은 예측을 못 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는 눈 폭설에 대해서 예보가 정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장 전병성** 예.

○**박대해 위원** 그렇습니다. 눈이 내리느냐, 비가 오느냐는 기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같은

강수량이라 하더라도 눈의 성질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예상 강수량이 1mm 차이가 나면 눈 두께는 1cm 이상 차이가 나게 돼서 더욱 예상 오차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눈 예보를 cm 단위로 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 전병성** 예,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가장 정확한 단위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보가 틀렸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기상청의 할 일은 좀 그런 비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확한 예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줄이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상청의 눈 예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국민들과 제설 작업을 대비해야 하는 전국의 공무원들, 또 제설 작업을 위한 장비 등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기회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도 기상청의 눈 예보 등 능력 제고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상청장 전병성** 우선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레이더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레이더를 통해서 단기적인 이상기후에 대해 정확히 예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크로포드 단장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들이 장비나 시설이나 또 예보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이화수 위원님 되시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한나라당 안산 상록 갑 이화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폐기물에 대해서 현행법은 그 종류별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그리고 지정폐기물, 그다음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李和洙 委員**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각각의 개별 폐기물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무래도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서 그 폐기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업종을 만들고 그의 처리를 하도록 제도화 해 놓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하나의 처리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다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폐기물이 분명하게 차별화될 경우에는 그 특성별로 처리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요. 어떤 폐기물의 경우가 양쪽 또는 세 군데 공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약간 혼란이라든지, 또 어느 것이 좋은지 하는 문제가 생기고, 최근 들어서는 처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재활용, 순환사용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업계 간에 이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李和洙 委員**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는 각각의 폐기물에 대해 허가받은 종류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하위법인 시행규칙 별표5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일정 부분, 폐아스팔트나 페콘크리트 이것은 건설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과 모순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분명히 일을 하려고 하면 상위법하고 밑의 영 또는 시행규칙 체계를 일치시켜 가지고 오해를 빚거나 문제가 제기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안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李和洙 委員** 그래서 이게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장관께서 수정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때도 “그 문제를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사실은 이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동안 법령 개정 작업을 하고, 법제처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의견이 환경부가 제시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갔고, 결국은 법 개정할 때 이 부분 반영을 해야 됩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하고서는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그다음에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법제처의 의견은 시행규칙을 갖다가 개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환경부는 지금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존경하는 이화수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 처리에 목표를 둘 때만 같으면 이 사안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든 간에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시켜서 재활용 폭을 넓히자, 이렇게 목표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치 판단을 해야 될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의 상·하위 체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담 부처인 환경부가 어떤 쪽으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좀더 재검토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앞으로 법령 정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해 오던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고, 또 새로 나가는 방향이 옳다는 의견도 있어서 국가 내지는 공익 차원의 방향 모색도 필요하지만 업계의 의견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고, 또 실제로 재활용되고 처리되는 과정을 좀더 정밀하게 점검하고 평가를 해서 앞으로 법령 개정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설폐기물 업체의 의견을 중요시해서 시행규칙을 개정 안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갖다가 재활용 차원에서 자꾸만 언급을 하시는데 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이것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래서 결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가 말씀 올리고 있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쪽으로 가는 것인데요.

이게 시장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 법령도 일치시키고,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도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확정적인 정책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소 업계라든지 또는 시장에서 의견이 있지만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말이지요, 빨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의지만 가지면 되는 건데 제대로 시행규칙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상당한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폭넓게 저희들이 의견도 수렴하고, 현재 양쪽 내지는 업계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의견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법령 혼란으로 인한 시장의 문제가 없도록 조속히 노력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4대강이 잘못된 거다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함안보 건설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침수될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장관 이만의** 4대강 살리기를 목표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설립할 때 사실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확정된 계획입니다.

다만 관련된 분석, 예를 들자면 함안보 같은 경우에 주변의 여러 가지 토양·지질 분석까지를 다 마쳤으면 정확한 계산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느 경우에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너무 힘이 드는데 다행히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또 그동안 초반기에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미 보정을 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검토를 안 해서 보의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영산강 죽산보 건설 현장에서는 물이 넘쳐 가지고 보리밭을 침수시키는 사태가 또 발생했거든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영산강 문제는 사실은 시공 현장에서 소소한 졸속 판단이라고 하면 졸속 판단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생겼지 보 건

설 계획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농경지를 망쳤다, 이래서 또 뉴스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이 오해를 하거나 또는 공사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미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공 관계자들에게 일해 나갈 수 있는 방향과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4대강 추진본부, 국토해양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담조직, 환경부 같은 데는 이미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러한 여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李和洙 委員**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차명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차명진 위원** 한나라당 차명진 위원입니다.

Dr. Kenneth C. Crawford!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지요?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Kenneth C. Crawford** 지금 기상청 기상선진화추진단장으로 재직 중이고요. 그리고 ‘기상청 예보의 선진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라’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차명진 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좀 쉽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금년에 상당히 많은 눈이 내리고 또 평소보다 아주 낮은 온도가 있었습니다, 금년 겨울에. 이것이 우리가 평소엔 듣는 지구 온난화 현상하고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실제 연관이 있는 건지, 그리고 내년 겨울에는 어떻게 기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Kenneth C. Crawford** 지구 온난화와 올 겨울 폭설이 저는 관련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기상학

자들은 태평양의 강한 엘니뇨와 또 북극진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현상이 맞물리면서 생기는 날씨 현상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기상학자로 일을 했지만 이렇게 올해처럼 두 가지 현상이 합해지면서 강한 날씨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저도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R&D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륙, 북미나 동아시아, 유럽 같은 모든 대륙이 눈도 많이 내렸고 추웠습니다.

○차명진 위원 내년 예측은?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Kenneth C. Crawford 올해 겨울도 오클라호마(Oklahoma)보다 한국이 더 추웠고, 오게 될 내년 겨울 날씨가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차명진 위원 만약 금년과 같은 현상이 또 계속 지속될 거면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재해 대책과 그다음에 겨울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될 텐데 예측이 안 되어서 참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Kenneth C. Crawford 저도 기상학자로서 이렇게 예보가 엇나갈 때마다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처럼 날씨가 틀릴 때마다 많은 영향을 받는데, 잠도 못 자고 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리고 혹시 영화 ‘2012’를 보셨는지요? 그리고 그것 보셨다면 2010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Kenneth C. Crawford 영화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가 기상학자로서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해 주셔서 일단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기상학자로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영화에서와 같은 상황이 현실에 일어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Kenneth C. Crawford 감사합니다.

○차명진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이 직접 대답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4대강 준설에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4대강 준설의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영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들이 있어요, 주로 환경단체들. 그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우리가 들은 것은 듣고 또 고쳐질 것은 고쳐지는데……

최근에 제가 아주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접했는데 ‘강을 준설하는 것 자체가 자연법칙에 반한다’, 주로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대화도 어렵고 그런데 혹시 외국의 경우에 강을 준설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제 눈으로 본 것도 있습니다. 영국의 템즈강도 대대적인 준설을 해 가지고 수질 개선을 하면서 강 전체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세느강도 지금도 정례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고요.

또 라인강의 여러 구간에서도 준설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보지만 허드슨강도 준설을 정례적으로 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준설할 때 그 지역에 특별한 자연주의자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이든가 하는 분들이 이게 자연의 법칙에 반한다고 반대운동을 한 사례는 모르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모르고요. 서구적 합리주의 사고로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차명진 위원 한번 찾아보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찾아보셔서 장관님, 외국의 경우에 강을 준설한 사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정말 자연의 법칙에 반한다고 그랬는지……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4대강 퇴적토가 오염이 됐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차명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클레……

퇴적토가 오염되면 준설을 하면, 뭐 오염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오염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견도 있지만. 오염되었으면 준설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저는 오염되었으니까 오히려 걷어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견해인데요. 솔직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답을, 답을 못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제개발 과정에서 하천이 하절기에 홍수를 겪다가 가을부터 봄까지는 주로 강수가 적어서 그것이 굳어져 가는 과정을 반복해 왔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홍수 또는 유입수가 미치는 퇴적물들이 축적이 되는데 오히려 준설하는 기회를 통해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하천의 오염 소지를 없애거나 줄이고, 둘째는 하천 유입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명진 위원** 그것도 좀 사례를 수집해서 가지고, 제가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언론 같은 데에서 오염됐으니까 준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오염은 준설하는 게 낫고, 어떤 오염은 준설 안 하는 게 나은지 좀 정확하게 환경부에서 조사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차명진 위원** 통역을 대동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좀 충실히 답변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조원진 위원** 낙동강 퇴적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지금 달성보 쪽에, 지역구가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요. 작년 11월 13일 날 가 보고 올해 2월 10일 날 갔는데, 2월 10일 이전에 퇴적토가 발견이 되어서 야당에서 문제가 있다……

야당에서 오니라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원진 위원** 우리는 퇴적토라고, 진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2월 10일 날 제가 가서 이 퇴적토를 떠 왔는데 한번 보시지요. 장관님, 이게 오니인지, 진흙인지 한번 정확하게 냄새도 맡아 보시고……

이것 좀 전달해 주시지요.

(자료를 전달함)

뚜껑 열어서 냄새 한번 맡아 보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못 느끼겠는데요?

○**조원진 위원** 냄새가 거의 없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원진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퇴적토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구미 위쪽에는 퇴적토가 없거든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원진 위원** 그런데 구미 이하로, 예를 들어서 달성보, 함안보 이쪽으로, 대구를 거치고 밑으로만 퇴적토가 발견된단 말이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원진 위원** 그것 원인이 뭐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까마는, 우리 차명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리면서 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하천에 유입수 또는 홍수 철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느냐 하는 걸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말하면 퇴적토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오니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우리들의 처치를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를 해 두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퇴적토 문제가 제기되면서 앞으로 환경평가 부분도 많이 보완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지질 분석에 대한 별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고는……

○**조원진 위원** 장관님 말씀 듣다 보면 답변 하나도 못 듣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이 부분까지 포괄하기는 힘듭니다.

○**조원진 위원** 기다려 보세요.

제가 질의할 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퇴적토가 몇 m에서 발견되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지역별로 좀 다른데 그 자료가……

○**조원진 위원** 달성보에서는 몇 m에서 발견됐어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뒤를 돌아보며)

자료 좀 쥐 보세요.

○**조원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원진 위원** 달성보 8m 봤는데 3m에서 5m 사이에서 퇴적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정

해서 3m에서 5m 사이에서 퇴적토 발견된 게 몇 년도 정도에서 이 정도 퇴적토가 발견됐는가,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적토가 나온 것은 아는데 조사를 안 했습니다.

○**조원진 위원** 두 번째는……

조사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업무 보고하면……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니, 그……

○**조원진 위원** 장관님, 야당이 지금 자료를 다 쥐고 안 나왔는데 조사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퇴적토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조원진 위원**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원진 위원** 의문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가서 손으로 떠서 만져 보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 정세균 대표는 함안보까지 가서, 그쪽에 가서 직접 또 떠 가지고, 홍희덕 위원 몇 번 와서 떠 가지고 왔어요.

문제는 지금 결과가 홍희덕 위원은 비소가 7.1 정도가 나오고,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5.5가 나오고, 수돗물분석센터에서는 3.1이 나오고, 환경과학원은 5.7, 수자원공사는 5.0, 다 달라요. 이 분석 결과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비소 함유 분석 결과가.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장관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그 부분을 좀 연구하셔야 됩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원진 위원**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이런 겁니다.

야당의 생각은 지금 퇴적토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해 달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사가 언제까지 중단될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분석의 결과를 정확하게, 이것은 계속 한쪽 한쪽씩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정확하게 환경부에서 이 내용을 갖고

게서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희들이 지금 4대강에 대해서 225개 조사 지점에서 퇴적토를 추출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장관님, 잠깐만요. 제가 225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달성보하고 함안보에서 나오는 진흙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원진 위원** 왜 진흙이 이쪽 부분에서만, 달성보·함안보에서만 나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문제거든요, 상류에는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미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의 흐름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속도가. 구미 위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강이 굽이치는 쪽에서 계속 퇴적토가 쌓여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전문가 분들이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 퇴적토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도 모르고 준설해서 그냥 방치해 놓는다,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원진 위원** 또 한 가지는요, 퇴적물 기준에 대해서 네덜란드만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대적인 4대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야당의 주장을 얘기하면 지금 달성보의 비소 기준이 미국 기준은 초과하고 기본적인 우리 한국 기준이나 일반 기준은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퇴적토가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고 국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준설을 해서 그냥 방치해 놓는 상황은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나 주변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원진 위원** 장관님, 한강 위 먹는 물에서 이런 문제가, 퇴적토가 발생했으면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방 사람들을 무시하느냐는

겁니다.

퇴적토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높이로 퇴적토가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전부 다 쉬쉬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 퇴적토에 대해서는 세부조사를 해 가지고, 특히 3월 달부터 수중 준설을 하니까 이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가물막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첫 가물막이 공사에서 그게 나온 겁니까.

다음 두 번째 가물막이, 강 중심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일 첫 가물막이 공사, 강 좌측에서부터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장관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 잘 모릅니다’ 해 버리면, ‘이것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언론에서 수도 없이 떠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과거에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거기에 퇴적이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원진 위원** 또 하나는요.

장관님, 2000만 명입니다. 2000만 명이 먹는 물입니다. 그냥 대구·경북하고 부산·경남까지만 따져도 1200만 명이 먹는 물이거든요. 서울 1000만 명이 먹는 물에 퇴적토가 발견되었다…… 공사하시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하는데 장관님이 가장 핫이슈라고 생각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덜 되었다는 얘기를 할 바에는 뭐 하러 나왔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된 자료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원진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립환경과학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오늘 개성공단 출장 갔습니다.

○**조원진 위원** 자, 2007년도·2008년도 국립환

경과학원에서 국민 생체시료 중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했다, 2007년 조사결과에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서 혈중 수은농도가 무려 29.672, 전국 1위, 경북 영천시 신령면에 거주하는 사람의 혈중 수은농도 26.709, 전국 2위, 경북 포항, 대구 수성구·서구·중구·남구 거주하는 사람들의 혈중 수은농도가 높게 나오고 2008년도 조사결과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하는지 아세요? 혈중에 수은이 나왔다…… 수은이 얼마나 위험하느냐 그러면요, 수은은 태반에서도 걸러지지 않는 2세에게 물려주는 대표적인 중금속이다, 시간 조금 더 하겠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예.

○**조원진 위원** 대구·경북 지역의 영아사망률이 전국 평균 1.5배에서 2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영아 사망률이 전국 평균의 1.5배에서 2배, 선천성대사이상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보도가 있다, 혈중 농도 결과가, 혈중 수은의 고농도 상위 지역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북 영천, 경북 포항, 대구 그다음에 경북 군위, 이게 집중적으로 포함된 4개 지역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래 가지고 지난 1월 13일에 저희가 주관해서 관계 부처하고, 경북 등 관계관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자, 이 회의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첫째는 왜 그 지역에 수은농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일부 어류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러면 그 섭취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관리를 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이 위험하다, 수은 섭취 가능성이 많다 하는 등 위해성 소통방안을 논의했고, 앞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논의했습니다.

○**조원진 위원** 일부 어류에 대한 부분은 극히 소수입니다. 요새 돔배기 비싸 가지고 사먹지도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장관님. 보고서 주는 대로 그냥 읽지 마시고요. 영아 사망률이 전국의 1.5배, 2배입니다. 지금 발각 뒤집어질 상황이에요.



혈중 수은농도가 대구·경북에서 왜 1등 2등이 매년 이렇게 나오느냐, 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발표 안 하시는 거예요? 담당국장 누구세요? 용역결과 나왔는데 왜 발표 안 해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오종극** 일단 경북 측에서 공개를 좀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원진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는 말이지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당장에 혈중수은 농도문제인데 그걸 보류하고 있어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오종극** 섭취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공개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철저한, 감사원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요청을 하겠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예.

○**조원진 위원** 정부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보고 안 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원인인지도 모르고 지금 뭘 섭취하든지, 무슨 물을 먹든지 국민들 생각해 보셨어요? 영아 사망률이 전국에 대해서 1.5배, 2배 정도의 영아 사망률이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왜들 이러세요, 진짜?

최소한도로 제가 여당 위원이면서도요, 지금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어디에서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고 공개하지 않고, 그게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바로 직격탄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혈중 수은농도가 있으면, 수은이 많으면 어떤 결과 있습니까? 태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가지 않습니까?

국장님!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오종극** 예.

○**조원진 위원** 없습니까?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오종극** 신경계통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게 태반에서 걸러지지 않은 게 말이지요, 혈중 수은입니다. 이 문제가 몇 년 동안 있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발표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까 이화수 위원님께서……

○**강성천 위원** 서면질의……

○**委員長 秋美愛**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이 업무보고는 몇 가지 심각한 환경부 소관 현안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세하지 못하고 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선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한강의 수질오염이 악화돼 간다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간략한 보고 이외에 정확한 진단과 향후 대책 이런 것이 좀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는 매우 부족하고……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委員長 秋美愛**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 보에 대한 사업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속도를 내게 되면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환경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좀 집중이 되어야 될 때 같습니다.

그리고 준설토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원진 위원님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서 많이 제기를 해 주셨는데 우려되는 점은 일단 비소나 이런 심각한 중금속의 오염수치가 가볍다, 무겁다 그런 문제 또는 그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다 아니다 그런 인용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지적처럼 우리는 다른 식수원을 사용하기가 어렵고 강물 자체가 우리가 먹는 귀중한 생명수이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파리의 세느강이나 템즈강을 아무리 인용하셔도 우리가 그걸 참고할 수가 없겠지요. 아무리 또 미국 사례를 인용하셔도 강물을 마시지 않는 미국 같은 기준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준설토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바로 식수원을 오염시킨다는 직접적인 문제하고 또 준설토의 사후 처리가 시공사에 맡겨져 있다든가 아니면 골재와 함께 섞여서, 바로 그 지자체에 위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환경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직접적으로.

사전 환경성 평가도 안 하였고, 사후에도 손을 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해도 환경부는 그냥 듣기만 하시지 아무런 사후약방문조차 내시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이 준설토가 농경지 매립지로 쓰여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랜덤으로 조사를 하시겠다 하는 건데 조사해서 다시 파헤칠 겁니까? 환경부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오염이 확인된 준설토인만큼 준설토를 매립장을 따로 구하도록 비상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쓰레기 처리 매립지처럼 따로 매립지를 확보하도록 정부에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환경부가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후에, 그것을 조사한 다음에 반출을 허용할지 말지는 따로 단계적인 방법을, 사후대책이라도 좀 꼼꼼히 하지 않으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4대강 추진본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부 및 기상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는 박대해 위원님, 박준선 위원님, 차명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이화수 위원님으로부터 각각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취지에 맞도록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환경부장관님, 기상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개의되며 노동부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환경부 및 기상청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이유는 노동부의 2010년도 업무집행 계획 및 예

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들이 들으시고 이에 대하여 정책적인 평가와 의견을 개진하여 노동부가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장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임태희 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고용위기 극복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정책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 노동정책 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회복 신호를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긍정적 징후를 보이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기적 요인 외에도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고 인력 수급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금년도 노동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제위기로 고용여건이 악화된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체제 구축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근로빈곤층, 여성, 고령자 등 취업애로 4대 부문에 대한 적극적 고용촉진 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스매치 해소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구인·구직중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와 구직자를 단순히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서로의 요구를 조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더 좋은 일자리로 더 많은 사람의 이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가 전문적인 진로·취업상담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통합적

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할 것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단시간 근로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를 만들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활성화, 정년 연장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통해서 노동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직업능력개발체계의 성공적인 정착과 수요자 중심 훈련체계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분야인 사회적기업은 지자체,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따뜻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고용 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장이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노사단체가 함께 노력하도록 통계 인프라, 재정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30여 개에 이르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각종 제도와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한 만큼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선진화는 국민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핵심과제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포함해서 새로운 노조법의 연착륙을 위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현장 교육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밖에 다양한 정부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이 정당한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

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우리 노동부 직원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최고 고객으로 여기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법과정부터 재원 마련, 정책 추진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노동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날짜로 고용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저희 노동부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 부여된 직책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수 차관입니다.

이채필 기획조정실장 겸 노사정책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이재갑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입니다.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입니다.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김운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입니다.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입니다.

조병기 정책기획관입니다.

한창훈 국제협력관입니다.

박종길 대변인입니다.

정철균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노동부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현안을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채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기획조정실장 이채필 금년도 노동정책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노동시장 여건, 주요현안, 그리고 2010년 입법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근 노동시장 여건으로 고용 동향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 취업자는 2286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5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 취업자가 2만 9000명이 증가하는 등 민간 부문의 취업자는 지난해 4/4분기 27만 2000명 감소에서 금년 1월에는 1만 1000명 감소로 민간의 일자리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은 희망근로사업의 종료 등으로 작년 10월 33만 2000명에서 금년 1월 1만 6000명으로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1월 달 실업자는 121만 6000명으로 2000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개선, 내수 회복 등으로 연간 5% 내외의 경제성장이 전망되지만 고용은 경기후행지표로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취업자 수는 20만 명 내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올해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인상 기대심리가 고조되고 일부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자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노사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현안입니다.

첫째, 적극적 일자리 대책 추진계획입니다.

경제위기 여파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업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입니다.

청년 고용 촉진은 중소기업과 청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대졸자, 전문계고 청년 구직자 DB 80만 명, 우량 중소기업 DB 6만 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의 채용 수요 등에 맞추어서 맞춤형 훈련 실시 후 취업으로 연계해서 13만 7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취업지원관을 학교별로 배치해서 직업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문인턴제를 도입해서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인력 수요가 많은 전문 기능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문인턴제는 참여조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젊은이에게 창직·창업 지원을 해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청년인턴제와 훈련 프로그램을 융합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근로빈곤층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작년도 1만 명 수준에서 금년도 2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고령자, 저소득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서 1 대 1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주치의를 26개 고용지원센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는 일과 가정이 양립되도록 단시간 근무 가능 직무를 발굴해서 공공부문부터 먼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서 컨설팅, 신규 고용 시에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 설치 시에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5년생~63년생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가 712만 명으로 향후 9년간 집중적인 퇴직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 연장 촉진을 위해서 임금피크제 제도를 개선하고 정년 연장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력 취약층을 위해서 훈련·고용·취업지원 등 토털서비스를 특성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 퇴직인력 DB, 중소기업 DB를 구축해서 중기협·전경련 간에 MOU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고용창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일자리 중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워크넷에서 구축 중인 대졸·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구직 DB를 취업애로계층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량 중소기업 DB 6만 개와 함께 중소기업 빈 일자리 DB 3만 개를 10만 개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확충된 일자리 중개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구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래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취업·교육훈련·창업 등의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직업소개요금을 자율화하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민간 위탁사업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주계약자 방식을 통한 선도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인증마크 사용이라든지 종사자의 교육훈련 지원 등 인

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입법 준비작업을 해서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입니다.

자기 주도적 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정착에 필요한 훈련 상담, 직종 편중을 해소하고 대상 과정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야간 고급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카드의 발급기간도 2분의 1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산업별 협의체를 확대하고 수요조사, 맞춤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특화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새로운 일자리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일자리사업 중에서 수익성과 자립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금년도에 200개 정도 전환·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사회적 기업 설립 확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과 연계해서 1사 1 사회적기업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서비스 수혜 비율을 조정하는 등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인증과 재정 지원을 분리해서 사회적 기업 설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추진체제 구축입니다.

지역단위 일자리 역량 강화입니다.

기초·광역 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 임기 중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활성화해서 지역고용대책을 수립·추진토록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재정지원 방식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 일자리 수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를 구축해서 주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대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우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5월까지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일자리 사업을 재분류해서 효과를 평가하고 효과가 나은 분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정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고용 영향을 평가하고 고용창출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

습니다.

국가고용전략 수립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고용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복지 교육 노동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 분야를 논의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으로서 노동조합법 개정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추진 현황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지난 2월 12일 개정하였습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노사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구 단일화는 어떤 노조가 교섭 요구를 하면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고 다른 노조의 교섭 참여 의사표현 기회를 부여해서 참여 노조를 확정·공고해서 정하는 절차를 밟고요, 이렇게 해서 교섭 대표노조 결정 절차는 먼저 개별교섭에 노사가 동의하거나 또는 자율 단일화 할 경우에는 확정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로 확정이 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확인하여 과반수 노조로 정하게 되고요, 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정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해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은 사항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를 위해서 노동계, 경영계에 근면위 위원 추천을 2월 12일 날 요청을 했습니다. 2월 19일까지 1차 기간을 부여했고 기간을 2월 24일, 오늘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달 중 위원회 구성 후에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 심의·의결, 그에 따른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제도의 연착륙 기반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중앙·지역·사업장 등의 차별화된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개정 노조법의 현장 조기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작동 지원

을 위해서 현장의 업무가 될 수 있게끔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현장 노사 지도와 관련해서 대기업,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사용자 측의 원칙 준수 집중 지도, 새로운 제도를 둘러싼 노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간제근로자 등 고용개선 방안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도와 차별시정 활성화입니다.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하고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통해서 고용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 중소기업 고용여건 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서 고용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종합적인 차별예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차별 여부 체크리스트를 보급해서 자율적으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대량 실직이 발생하는 직종에 대한 대안입니다.

기간 제한으로 인해서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다수가 실직되는 대표적인 직종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예외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노동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업의 고용실태, 근로자의 고용형태 이동 등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입니다.

신속한 임금체불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수사, 체당금 및 생계비 대부사업 등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향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명단 공개, 사전 상담기능 강화 등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산재다발·취약부문 관리 강화입니다.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3대 재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기술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공사 참여자 역량 및 책임 강화를 위해서 발주·설계·감리·시공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특성별 안전보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증진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석면해체 현장 기술지원, 지방청별 재개발 현장 석면 합동대책반 운영,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입법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정부 입법안 19건을 포함해서 156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신규 상정이 필요한 법안이 11건이고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이 현재 10건인데요,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인데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동부 직제 개정 내용입니다.

전임자·복수노조에 관한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 이런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지원을 하고 국가 고용전략회의 운영 등 국가 고용정책기능 강화를 대비하고 고용노동부를 대비한 조직과 기능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전의 2실 12국 35과 1단 1팀에서 3실 13관 35과 2단 5팀 5740명이 되었는데 요, 주요 내용을 보면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공공노사정책관을 통합해서 노사정책실을 개편하고요.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고용정책관을 노동시장정책관으로, 그리고 인력수급정책관을 신설하면서 고용전략과, 인력수급정책과를 보강·신설하였습니다. 특히 민원업무, 읍부즈만 제도 등과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품질 제고를 위해서 기획실에 있던 고객만족팀을 감사관실 소속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밑에 기획지원팀, 전시체험팀 등 하부조직을 보강해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광역 자치단체, 수원 창원 울산 등의 지청장은 3급으로 보임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관서의 지원부서인 관리과를 센터로 통합·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환경부와 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 1년간 우리 환경부, 기상청 또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듣고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인데요, 지금 노동부에서는 주요현안 중심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오늘의 의사 일정으로 올린 것은 앞으로 1년간의 노동부의 골격에 가까운 그런 계획과 계속되는 사업, 그다음 순서로 이제 현안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안 위주의 보고가 돼 버려서 조금 준비가 소홀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서 보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 있습니다만 주요현안으로써, 우리가 노동부 업무 청취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이미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보도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허준영 철도청장이 지난번 철도노조 대량 파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전원징계 방침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파업과 관련해서 그 판정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먼저 대량, 전원징계 방침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아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 오늘 비록 야당위원님들이 불출석하신 그런 상태입니다만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자 우리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취합해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의 질의 순서대로 이어갈까요, 아니면……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방법은 국회법 제60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성천 위원님부터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성천 위원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강성천 위원 노동부가 그동안 일 많이 하셨네요. 직제 편성도 하시고 상당히 애쓴 흔적이 많습니다. 특히 고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다 보니 청년실업을 표현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실신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장관님께서도 이런 말 들어 보신 일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본 적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월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9.3%로 나타나 2004년 2월 9.5%를 나타낸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제 졸업하다 보니까, 졸업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년을 포함해서 6만 9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취업은 1만 4000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업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나 청년고용 대책은 아직까지 제 자리에서 이러한 호기를 놓칠까 우려가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근본적으로 청년들 고용은 기업들의 채용에 대한 투자, 투자를 통한 채용확대가 이루어져야 근본적으로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도 노동부의 청년고용 대책은 청년인턴으로 대표되는 단기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대통령께서도 ‘정부가 절박함이 없다, 구태의연하다’고 하셨는데 청년 구직자들도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현장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청년들이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

는, 흔히 미스매칭 현상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또 분명히 빈 일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잘 연결이 안 돼서 못 찾아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일자리라도 제대로 찾아 들어가게 체계를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일자리 중개시스템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올해 노동부가 제시한 일자리 대책의 방향은 정부 주도에서 벗어난 지방 주도 정책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육성입니다. 특히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서 지방 주도적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일자리 공시제는 지자체의 고용 확대 노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지자체 간의 선의의 경쟁을 야기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당장의 효과를 보기 위해 단기 일자리에 치중할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해 16만 8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당초 목표였던 10만 개를 초과 달성했지만 이 가운데 60%가 공공근로·희망근로 등 한시적 일자리에 그쳤습니다. 장관님, 다른 곳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를 통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그 지역에서 제공하는 노동력에 적합한 구직처 개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을 주관하는 노동부와 지자체의 협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와 노동부 간 MOU를 체결한 것 외에는 지자체와 노동부가 각각 일자리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잘 교류되지 않고 업무의 중복이 있을 수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가 앞으로 일자리 대책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별로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직접 관청 간에, 저희 노동부와 경기도 간에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는 형태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노사민정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대책에 대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알겠습니다.

부처 간 일자리 대책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는 224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상과 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었고 이들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만 가중시켰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알고 계시죠?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지적하신 점이 상당히 재정을 써가면서 일자리사업을 너무 다양하게 펼치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뭔지, 심지어 담당하는 사람조차도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정비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고용노동부로 명칭만 바꿀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의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명칭만 바꾸려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노동부의 여러 가지 업무체계를 이제 정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로 인식을 하고 저희들 업무체계도 일자리에 중점을 두어서 개편을 한 것입니다.

○강성천 위원 덧붙여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근로자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유연근무의 시행으로 단시간 상용직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취약근로자가 노동 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정부의 단시간 상용직 확산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유연근로, 또 단시간 근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근로의 고용의 질을 낮추는 이런 결과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들은 유연성을 통해서 사정이 오히려 그런 것을 선호하는 이런 근로자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제대로 된 직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런 직장이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설립될 가칭 차별시정 종합센터가 지방노동위원회나 지방청에 연계해서 차별 시정을 위한 네트워크의 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차별 해소를 통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 차별시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런 차별시정대책에 대한 노동부의 추진 계획이 무엇입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별시정 종합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전국에 6개 청이 있는 지역에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4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텐데 지금 각 현장에서 지난해부터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근로 형태에 따른 차별 문제가 저희들이 정말 현장 중심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발전재단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은 제도적인 대책대로, 또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는 조치대로 아주 다양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차별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런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보완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까지 바뀌가면서 고용정책에 대한 적극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전시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요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감사원에서 정규적인 감사 외에 어떤 특별감사가 이렇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감사원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노조전임자 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는 무시되고 노조전임자 수가 점수화되는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노조전임자 수가 평가되고 점수화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아, 지금 정부에서 출범 후에 공공부문에 대한 선진화가 필요하다 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공공기관에 대해서 시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결국은 노사관계에 대한 선진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선진화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면서 전임자 숫자라든가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도 항목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전임자 수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견되었던 공공기관 전임자들이 복귀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사례는 듣고 있습니다. 복귀하는 사례를 꽤 듣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 어떻게 받았는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지금 현재 한국노총 같은 경우엔 7명이 현재 복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강성천 위원** 파견 전임자들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파견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와 기관장 경영평가가 맞물린 시점에 공공기관 전임자의 축소하고 파견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래서 파견자 복귀 문제는 단체협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복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또 전임자 축소 문제의 경우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어차피 새로운 전임자 제도가 시행이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아마 자율적으로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런 조치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기관장의 경영평가를 이유로 노

사 합의로 결정된 사항을 노조법 시행도 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복귀명령을 강행한다면 정부 스스로 노사자율의 원칙을 깨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단체협약이 지난 노조법 개정에서도 금년 1월 1일 이전에 유효하게 설립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만료기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얼마 전 언론에 노동자를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한발씩 물러서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장관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강성천 위원** 지금 거기에 변함이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단체협약은 일방적으로 해지되고 단협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장관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아마 단체협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단체협약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지도 당연히 저는 만료기간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는 단체협약은 당연히 노사 간에 이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저희 정부가 단체협약의 개별적인 사항까지 이렇게 관여하는 것은 현재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게 사기업이 아니고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부가 시정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강성천 위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가령 무시된다거나 유효하게 설립되고 현재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옳지 않은 조치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은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가 노사자율의 원칙이라는 대명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율적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장관님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효한 단체협약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그것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해서 노동권 보장이 결국은 그러한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정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다면 노동부가 앞장서서 노사가 협력하고 발전하는 진정한 의미의 노사관계 선진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조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관님, 꼭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하여튼 노사는 상생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가야 건강한 노사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해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대해 위원** 박대해 위원입니다.

지난해 장관님을 비롯한 노동부 간부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약칭해서 근면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년 만에 노조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대신 타임오프 제도가 금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 정부는 노조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참 어렵게 마련된 그런 법인데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근로시간면제심 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타임오프를 어디까지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위임을 하고 있어서 향후 근면위의 과정에서 큰 논란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법 부칙에 따르면 근면위는 금년 4월 30일

까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전에 근면위 구성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주노총 때문에 근면위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참여 여부를 놓고 3월 초까지 결정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민주노총이 근면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노동부는 기다릴 겁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2월 12일 날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런데 2월 19일 날 1차 시한으로 정했습니다라는 민주노총만 제외하고 다른 데서는 위원 추천이 다 되었습니다, 2월 19일까지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노총을 위해서 일주일 더 연장을 해서 2월 24일까지 위원을 선임해 달라, 추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오늘이 시한인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애로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30일까지 심의기한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 심의기간을 60일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달 안에 첫 회의를 열어서 결국 이 논의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민주노총에서 3월 초까지, 내부적인 체제 정비를 이유로 3월 초까지 좀 그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떤 내부적인 절차를 이유로 해서 이걸 연장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위축을 해 달라 하고 재차 통보를 하고 오늘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좋습니다.

어떻든 우리 노동부에서는 오늘까지고 민주노총은 3월 초까지인데 아까 여러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이 근면위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거의…… 하여간 매일같이 촉구를 하고 이 문제는 어떤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노총 차원에서 필요하면 직책으로 위원을 추천을 하고 나중에 내부사정에 따라서 직책이 바뀌게 되면 또 교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좀 운영하자고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계속 접촉을 해 가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 지금 노사정만 하더라도 민주노총 불참으로 대표성이 약해져서 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이 근면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달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다음은 소위 아까도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라는 이 베이비붐 세대 문제가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산업화의 역군들로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들입니다. 규모는 현재 약 712만 명 정도인데 문제는 향후 9년 동안 연차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 후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대책을 보면 정책추진 과정에서부터 정책수단 선정까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를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노동부는 베이비붐 세대 고용지원책으로 임금피크제 제도개선을 통해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한전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정년연장에 노사가 합의했고 이러한 분위기는 여타 공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사기업은 모르겠습니다라는 공사나 공단 같은 공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그간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온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서 2012년까지 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인데 이 와중에 공기업 퇴직예정자들의 정년을 연장해 주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기업 정년연장은 청년 실업난을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임금피크제가 상당히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공기업 선진화로 인해서 금년 공기업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40.6%나 급감을 했는데 정년마저 연장하면 채용인원은 더욱 줄어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을 간단히 좀 밝혀 주시죠.

**○노동부장관 임태희**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 내에서도 별도의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임금피크제가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그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마 기업에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아마 이 경제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가진 특별한 역량을 좀더 그 기업에서, 기업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퇴직을 하게 함으로 해서 기업이 필요한 인력도 좀더 활용하게 하고 또 이 당사자들에게는 단계적으로 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퇴직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준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이것을 연장할 경우에는 이것이 비용증대나 이런 측면에서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시작하는 그 시점을 가급적이면 정년연령이 도달하기 전에 시작을 해서 좀 생산성이 가장 최고도로 높고 개인적으로 가장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점까지 우선 임금을 최고 임금으로 해서 점차 줄여나가면서 그 줄여나가는 임금이 재원이 돼서 직장생활을 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이게 바람직한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사정위원회에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을 지금 마쳤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마치 청년실업을, 새로운 어떤 고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이것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이 문제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충분히 논의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만 근로복지공단 김원배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질의라기보다 질책도 되겠습니다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며칠 전에 자료가 언론에 나갔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산재, 즉 산업재해라고 하면 일하다가 어디 한 곳이 깨진다거나 부러지거나 큰 사고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그런 경우에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박대해 위원** 그런데 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노동부 및 노동부 산하기관 산재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보니까요.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지난 5년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율은 8개 노동부 산하기관 가운데 매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1.16%를 기록한 2007년의 경우는 다른 산하기관 산재율의 10배에 달했습니다. 이 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금융업과 서비스업의 산재율이 0.15% 와 0.13%인 것과 비교하면 1.16%의 공단 산재율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높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지금 주된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행사, 행사가 많이 해서, 체육행사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이런 행사 도중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민원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해를 인정받느냐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그 고객들이 와 가지고 행패를 부리거나 이러면서 직원들이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하고 청원경찰까지 다 배치하고,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사 때는 안전교육을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재해가 많이 줄었고요. 또 청원경찰을 배치……

**○박대해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민원 같은 이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업무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산재다발업종의 지난 2007년 평균 산재율이 0.88%입니다. 같은 해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산재율은 1.16%입니다. 이 공단의 업무가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 더 위험하고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이처럼 유독 공단 직원들이 산재율이 높은 것을 합리적으로 납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사 직원에게는 산재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공단의 높은 산재율을 설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단의 산재판정 유형을 보면 그런 정황이 나타납니다. 지난 5년간 산재판정을 받은 총 79건의 공단 산재 가운데 체육행사와 워크숍에 참여했다가 산재를 받은 건이 총 27건으로 전체 산재의 34%에 달합니다. 유독 공단에서만 이 체육행사나 워크숍 산재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그게 많은 편이라고 봅니다.

○박대해 위원 제가 여기서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고 하면 좀 문제도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다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요. 어떻든 지금 정부에서는 말이죠, 산재를 줄이기 위해 수년간 연간 수백억원을 사용하면서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공단 직원들 이렇게 산재특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무슨 변명을 하시더라도 이걸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박대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대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노동부장관 임태희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예.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도 박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의 보도를 보고 저도 정말 참 놀랐습니다. 이것은 아마 어떠한 설명을 거기다 붙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기관이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그 산재 혜택을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있다는 건 정말 저희들로서도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고 저도 장관으로서 생각을 해서요. 이 문제는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위원들의 어떤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제도상에 어떤 허점이 있는 것인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실태조사를 제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도 근본적인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점 보고드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수 위원님 순서인데요, 대신에 차명진 위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차명진 위원 한나라당 차명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작년에 노조법 관련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습니까?

이 노조법과 관련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LG전자에 있는 노조, 단위노조, 노조 맞죠?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맞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런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이는 노조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노조의 상급단체죠. 뭐 노조의 일종으로……

○차명진 위원 노조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차명진 위원 노조 중에서 상급단체로 통칭하죠?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차명진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이라고 우리가 그랬죠?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차명진 위원 지금도 이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의 용어는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를, 타임오프의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거와 관련돼서 나온 용어인데요.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에는 맞습니다. 이 용어는 분명히 현재 비판이 있듯이 포괄적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차명진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노사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서로 노사에게, 보다 분명히 표현하면 공동의 이익이 되는 이런 관계를 말할 텐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일은 단위노조 말고 상급노조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급노조의 활동도 뭐 해석에

따라서는 건전……

○차명진 위원 아니,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해 보자 이거예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차명진 위원 예컨대 이렇습니다.

상급노조에서 말씀이죠, 지금 이 나라는 자본가들의 땅이고 자본가들과는 이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고 따라서 자본가들에 대해서는 투쟁만이 노동자가 살 길이요 그래서 모든 사안은 투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교육지침서를 단위노조에게 돌리거나 단위노조 간부들을 불러들여서 교육을 했다 이겁니다. 이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합활동입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명진 위원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상급노조에서 노사가 함께 서로 상생하고 함께 협력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노동자도 사용자를 위해서 일정하게 역할을 해야 시장에서 생산성이 담보되는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인에게도 기업인들이 그 노동자들을 마치 가족 대하듯이 하거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때에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건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이런 교육을 했다 그러면 이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행위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런데 그것이 단위노조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건강한 노사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차명진 위원 아니, 장관님, 그러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동부장관이 왜 필요해요? 국장님들만 있으면 되지. 노사관계 담당, 일자리 담당, 그렇잖아요. 전체를 일컬어서……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말씀하신 상급단체에 과건되어 있는 노조의 그 활동에 대해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차명진 위원 예,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급단체의 악질적인 행동 때문에 우리 사용자들이 상당히 학을 떼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급단체의 행동은 무조건 다 건

전한 노사관계 발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법정신에 어긋난 해석을 자꾸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내용에는 상급단체이나 단위노조이나에 상관없이, 소위 말하면 층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활동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되고요.

다음, 좋습니다. 이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법에는 최종적인 권한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다가 위임하고 있죠, 그렇죠?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차명진 위원 현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 자체, 이 법을 만든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차명진 위원 추상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부의 시행령에도 구체적으로 지목이 안 되어 있죠, 아직?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차명진 위원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도 일부에서 오해가 또 있습니다.

마치 노동부에서 시행령으로 건전한 노사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목한 것처럼 오해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오해 없으시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근로시간 면제의 내용에 관련해서 말씀입니다 현재 시간 단위나 아니면 구체적인 인원 단위나, 이것에 대한 해석도 또 있습니다. 이 점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래서 지난번에 시행령에 그 조항을 정함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근로시간 면제는 근로의 주체가 사람이고 또 시간의 성격이 있고 해서 시간과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국제관례고 거의 제가 알고 있는 예에서는 전 국가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이 점도 말씀입니다.

장관님, 이 점도 장관님께서 그렇게 나름대로 관례나 상식에 입각해서 해석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도 결정권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근로시간면제위원회가 정합니다.

○차명진 위원 예, 실제 현장을 조사해 보니

‘야, 이것 시간 단위로 하니까 이걸 엄청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시간 단위로 하니까 오히려 좋은 면도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아주 이것을 심층적으로 현장조사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노동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에도 원래 이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이렇게이렇게 정해라 하는 그 규정을 정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부에서 있고 또 그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걸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그 규정을 다 빼면 그것이 마치 시간으로만 정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시간과 인원으로 다 정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차명진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면밀하게 끝까지 관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쭙보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면, 차 위원님 그 과정에서 일부 제도를 저희들이 규정을 해 놔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도록 정하면 그 자체가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그것이 악용되거나 혹시 규정을 안 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최소화하도록 명료하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예,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모호하게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일자리피크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임금피크제요.

○**차명진 위원** 예, 임금피크제.

지금 현재 고령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고령자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에

서 생산성을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임금피크제를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차명진 위원** 그런데 이 점 관련해서, 저는 솔직히 장관님과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청년 일자리를 대신 깎아 먹는 건지 아니면 청년 일자리와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사이에서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데, 노동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한 결론이 있으신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가 직접 연구한 것은 없고요. OECD에서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라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100% 국내에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이 OECD의 분석 보고서의 내용이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가 논의되면서 기존에 정년이 도달한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정년을 연장하되 그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게 되면 사실 그 부분만큼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신규 채용을 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정년이 도래하는 시점보다 이전에, 예를 들어서 3, 4년이고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 시작하면 그 경우에는 오히려 새로운 신규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러면 지금 임금피크제는 정년 이후에도 일부 적용되지만 정년 전부터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하게 새로 신규 일자리 창출의 여력이 생기는 부분도 있다 이 말씀……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래서 제도를 설계하기에 달렸는데요. 우리는 아직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에 대한 정형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심지어 40대 중반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40대 중반에 제2의 직장을 찾아 나가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그 직장에서 머무르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년보다 훨씬 앞당겨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럼으로 해서 신규 고용을 또 늘릴 수 있는 여력이 기업에 생겼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어떤 사례 소개 내용

이었습니다.

○차명진 위원 지금 법안이 제출되었는데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좀 더 세밀한 설계가 있으면 저희가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래서 지금 노사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비용만 증가시켜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기업이 월급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급여만 줄이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저희들이 좀 연구해서 관계 부처 간의 토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노동부에서 업무보고 시에 생략된 추가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아, 그래요?

그러면 강성천 위원님, 추가 질의……

○강성천 위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3분을 기다려달라고 하시니까……

○차명진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차 위원님,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차명진 위원 제가 평소에 장관님께 여쭙보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지금 시간이 남으니까 여쭙보겠습니다.

이것도 장관님과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 사회적기업에 관한 논의가 많이 있고 노동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한 대책으로 사회적기업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회적기업 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장관님, 저는 솔직히 일반기업과 그다음에 보통, 그전에는 아마 일반기업하고 복지사업 단위만 있었지요,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차명진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게 현실에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명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제가 몇 개 예를 들어드릴게요.

○차명진 위원 예.

○노동부장관 임태희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의…… 아주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가령 포스코에 포스위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포스코 직원들의 유니폼을, 작업복을 세탁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하게 되면 일반 세탁물로 처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장애인들이 그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회사를 설립해서 포스코의 세탁물을 처리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스코가 출자해서 만든 그 회사가 장애인들에게 자리를 주는 이런 형태의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대통령 모시고 다녀온 ‘동천’이라는 모자 회사도 결국은 그 회사는 지적장애자, 지적장애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학습이 굉장히 어려운 장애자들인데 그분들이 정상인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추를 아주 잘 단다든가 단춧구멍을 만든다든가 이런 특정한 재능을 모아서 모자를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형 사회적기업이지요.

또 다른 경우는 지금 마포구청 같은 데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품앗이 놀이방이라고, 아이들의 육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애기 엄마가 혹은 가족이 만나절은 봐줄 수가 있습니다. 만나절이 어렵지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마포구청에서 예를 들면 놀이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아이를 맡겨놓고 일을 보러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결국은 뭔가 돌봐주는 또 교육도 실시하는 이런 활동을 해서 거기에 일자리들을 만들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 같으면 집안 내에서 거의 모든 문제들을 사실은 해결했습니다. 아니면 집안에서 해결 못 하면 동네에서, 일종의 공동체 속에서 다 해결했는데 저희가 현대사회로 바뀌면서 집안에서 어느 누구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어렵고 공동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어려우니까 이 문제들을,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육아라든가 치안이라든가, 과거에 동네에서 야경 돌아주는 거나 똑같은 거지요. 아니면 고령자에 대해서 노인 수발이라든가, 아니면 관혼상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는 비즈니스로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기업으로? 이 부분들이 일종의 기업 형태로 돼서…… 특별히 기술이 없거나 멀리 집을 떠나서 직장을 구하거나 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런 공동체 서비스를 하나의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내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청년층의 경우에는 보다 더 국제경쟁을 해야 하고 정말 평생의 일자리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령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의 영역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창의력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키려는 후보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차명진 위원** 제가 이해를 잘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가족 내지는 복지 차원에서 되어지던 일들을 이제 상당수 일정하게 객관화하고 기업화해서 될 수 있도록, 다만 그것이 이윤과 관련해서는 이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윤이 목적은 아니지요.

**○차명진 위원** 저는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이 우리나라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도 의아심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단순재생산 중심으로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는 초기 투자가 빈약해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습니다.

**○차명진 위원** 기업들도 사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조 회사들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큰 리무진도 사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형태의 상조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상조회사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요즘 부족한 화장장도 자기들이 다 미리 예약도 해 놓고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데는 초

기 투자가 안 되니까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확대재생산이 안 되니까 추가 투자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잘 될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고민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서비스, 주로 아마 교육과 복지, 육아 이런 분야 또 관혼상제 이런 서비스들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그 경우에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지금처럼 완전한 기업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만 있게 되면 흔히 중산·서민층이나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서비스에서 다 소외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다음 소비자에게는 기업형하고 어떤 공공 부문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재원이 마련돼서 운영하는 형태가 두 번째 형태가 되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PPP라고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운영되는 기업 형태지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 다음 더 아랫단계, 그 더 아랫단계는 실질적으로 기업 형태가 아니라 그 윗단계에서 형성된 그 기업들이 활동을 하되 서비스는 바우처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초기의 기업으로 운영될 만큼의 기초적인 일종의 투자, 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계속 문제가 됩니다. 잘못 투자해 놓으면 이게 지속가능성이 없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업들이 가령 어디에 기부를 하면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기부하면서 1년에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들이 그 서비스를 싸게 해 준다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 준다면 그것은 사실 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더 지속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의 재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수단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런데 하여튼…… 철도공사 노사관계 관련 문건이 왔으니까 하나만 제가 여쭙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잘못하면 얼치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기업과 비교한 측면을 얘기했지만 과거의 복지사업과 비교한 측면……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 이런 것이 안 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을 남겨서 자기가 굴러가도록 해야만 사회적기업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복지사업에는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주로 국가에서 돈을 댔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낭비성이 상당히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제 일정한 나름대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그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자기 수익을 내서 굴러가야 된다는 명제가 있으니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것을 줄이고 바우처제도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도시락 만들기, 왜? 당장 내일 끊길지 모르니까,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차명진 위원 이게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하여튼 그 위상을 잘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하자. 그래서 고기를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혹은 고기 잡는 어장을 마련해 주자 하는 취지의 일종의 모델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종사하는 인력도 많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런 부분이 촘촘하게 발달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공동체의식이 아주 깊어 뿌리박혀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을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도 저희들이 좀더 연구해서 차질 없는 그런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저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입니다.

철도공사 노사관계 동향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노사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경위에 대해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철도공사는 08년도에 중단된 단체교섭을 09년도 5월 25일 재개를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24일까지 총 77회 교섭을 했습니다.

그간 노조는 단협 교섭기간 동안에 5차례의 파업과 태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조는 09년 11월 18일 확대쟁대위를 개최해서 11월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그런 투쟁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노사는 11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집중 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었습니다.

11월 24일에는 사측이 단협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단협 해지 통보에 따라서 금년 5월 25일 단협 해지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30일 노사는 교섭을 재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노사 간의 의견은 좁아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징계 및 손배청구 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년 파업으로 파면 30명, 해임 159명을 포함한 8000여명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징계재심 신청자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징계재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측은 작년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96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고 이에 노조는 사측에 파업 유도 피해보상으로 144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전망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파업 유도 관련 주요 쟁점은 첫 번째, 철도공사 노경팀장 회의에서 단협 해지 및 파업 유도 계획을 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사용자 측의 주장이 대립돼 있고, 파업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단협 해지가 파업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사측은 파업은 노조가 사전에 이미 계획에 의해서 파업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요 쟁점은 파업 이후에 과장급

조합원에 대한 노조 탈퇴 문제입니다. 세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 노사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작년 12월 30일 노사는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였으나 노조의 징계철회 요구로 인해서 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향후 투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나 현재 사측의 원칙 대응 방침으로 투쟁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노동부는 노조가 파업을 자제하면서 노사교섭을 통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징계 문제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에 따르도록 하고 노사 간 성실 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이 조기에 체결되도록 지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는 민·형사 및 징계처리 현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추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차명진 위원님.

○차명진 위원 조금 아까 국장님, 노경팀장 회의라는 게 있습니까?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그러니까 이게 09년 10월 9일 날 개최된 회의인데요, 팀장 회의입니다. 팀장 회의고……

○차명진 위원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그러니까 노경팀장이, 사용자 측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노경팀이라는 게 회사의 조직이예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예, 그렇습니다.

○차명진 위원 회사 조직인데 여기서 이게, 여기 노경팀장이라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그때 회의에서 팀장들이 모여서 단협을 해지하고……

○차명진 위원 그러니까 노경팀장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모이는 거냐 이거지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사용자 측 직원.

○차명진 위원 노무 담당?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예, 노무 담당자들.

○차명진 위원 그러면 직위가 어떻게 돼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실무자들이지요, 실무자들 22명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차명진 위원 실무자라니까 무슨 어느 정도, 회사에서……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거기 노경담당 부장도 있고요.

○차명진 위원 노동부로 치면 국장급, 아니면 과장급, 계장급?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그런 식입니다.

○차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그러니까 급이, 22명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직위가 부장이다 과장이다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부장급……

○차명진 위원 그게 중요하지.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과장급 이런 노경 담당자들입니다.

○차명진 위원 아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나면 단협해지 및 파업유도 계획을 논의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 사장, 전무급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 정도 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했다면 그런 정도 급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노경팀장들이 그런 급이 되느냐 이것을 제가 여쭙 보는 겁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과장님들끼리 모여 가지고 노조법에 대해서 ‘이 조항은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얘기해 봤자 그것은 그냥 꿈꾸는 거고 적어도 국장님이나 장관님, 차관님이 ‘이 조항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실효성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노경팀장 회의가 진짜 급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의 집행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여쭙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파악을 못 했나 보지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하여튼 실무자급입니다, 실무자급.

○차명진 위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노동부에서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하여 조사를 안 했네? 그래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파업유도를

진짜 했나…… 그렇지요, 안 해 봤지요? 이것 왜 안 해 보세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예컨대 노조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구제 신청을 한다든가 구체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만한 그런, 조사를 아직은 안 했습니다.

○**차명진 위원** 에이,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국정조사 문제도 제기됐는데, 야당 의원들께서 국정조사도 문제 제기했으면 노동부에서는 이것을 조사를 해 봐야지요. 해서 진짜 유도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저보다도 모르시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팀장에서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제가 얼핏 보고만 봐도 생각할 정도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국장님이 이런 것 관심 안 가지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 나중에 진짜 국정조사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사실 징계 문제가 어떤 경영권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서 조사를 직접 하기가 좀 곤란한……

○**차명진 위원** 국장님, 공부 많이 해 가지고 논리 따지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행정은. 현장에 가서 어떻게,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파악을 해야지요, 특히 노사관계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저희들은 노조가 주장하는 사항들을 좀 파악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도 사 측이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차명진 위원** 파악은 무슨, 노경팀장 회의가 뭐하는 데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이 회의는 어떤 공식적인 정례화된 회의는 아니고요, 정보 공유 차원에서 가진 회의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22명에 대해서 어떤 직책에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명진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쟁점이, 철도공사 노사관계의 쟁점이 뭐냐면 공기업 구조조정이 어떤 문제가 있다, 이 파업 과정에서 어떠한 손실이 생겼다, 피해가 있었다 이게 쟁점이 아니라요, 파업을 유도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지금 쟁점이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

는 이유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파악을 했어야지 그 문제를 파악 안 하고 여기 와 가지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네……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저희들은 파업 유도 주장에 대해서 단협해지를 통해서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그런 주장이 옳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어허…… 국장님, 그렇게 책상에서 옳다, 안 옳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그것은 안 맞고요. 현장에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저는 질의가 안 되겠네, 이것.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李和洙 委員** 국장님, 법리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파업하려면 해라 이것도 파업유도에 들어가나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제 개인적인……

○**李和洙 委員** 아니, 개인 사업장에서 나는 이것 수차…… 회사에서 교섭하다가 ‘우리 파업하겠다’ 그러면 ‘하려면 해’ 이렇게 하잖아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예,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면 파업유도예요, 이것도? 법리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파업유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면 아주 고도의 계획된 것을 해 가지고 했으면 파업유도가 되나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글썄, 파업유도라는 그런 것이 정말로 어떤 수준까지 해야 유도고 어느 수준까지 해야 유도가 아닌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노동조합 측에서 손해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 법리해석 좀 받아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예?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렇게 하고 지금 노경팀이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회사 측을 경영계 측으로 보고 노경팀 하면 노동조합 관리 업무를 하는 부서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팀원들이 주로, 인

적 구성원이 과장이다 부장이다 그다음에 책임자는 누구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조사해서 보내 주세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 4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환노위 위원들은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는데 제 경험으로 비춰서는 파업하려면 해라 이것도 파업유도에 들어가는 건지, 이게 법리적으로 맞는 애긴지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좀 정리해서 보내 주세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노동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철도공사 노사관계 동향 및 대책과 관련해서는 집중교섭이 결렬된 바로 직후에 단협해지 통보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집중교섭 도중에 교섭을 중단하고 단협해지를 통보해 버렸습니까?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24일 집중교섭이 결렬되자 사 측에서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니까 그게 시한이 24일까지 설정된 거였습니까? 24일까지가, 그러니까 집중교섭기간을 미리 시간을 정해 놓고 24일을 무슨 타임 리미트(time limit)로 했는데 그날까지만 되니까 해지 통보를 했다는 애깁니까, 아니면 죽 연이어서 그러한 마감시간 정함이 없이 교섭을 진행하다가 느닷없이 사 측이 결렬됐다고 하면서 해지를 통보했다 그런 애깁니까? 좀 더 정확하게……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집중교섭이 결렬되자 단협해지를 통보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중교섭을 24일까지로 집중교섭기간 설정을 했는지 여부는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노동부에서 그런 상황을 모르고 계시다면……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아마 사 측에서, 11월 26일부터 전면파업을 하기로 방침을 이

미 정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집중교섭이 결렬, 결렬이라는 것이 결국 교섭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더 이상 교섭이 진행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이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

○**委員長 秋美愛** 사실상 그렇다는 거지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예, 사실상. 그래서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사전에 집중교섭기간을 설정했는지 그 여부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아마 지금 말씀 취지는 안 한 모양이지요, 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결렬 사유로 내세우는 노조 측 주장과 사 측 주장을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노조 측 주장의 주된 내용들은 다, 정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또는 공기업 구조조정이라고 하지만 노조 측 입장에서는 다 어떻게 보면 인력 감축, 대규모 인력 감축에다가 전임자를 일시에 감축하는 이런 것들이어서 그런 것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정리된 것을 보니까. 사 측은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은 해 주지 않고 해고자 복직 요구하는 것 응할 수 없다 이런, 동문서답 식으로 서로 맞대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노동부 파악 문건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노동부에서는? 무리한 공기업 구조조정, 공기업 선진화 방향도 역시 조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소프트랜딩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늘 소프트랜딩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또 역시 노사관계의 자율 존중을 우리가 우선시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경직되게 끌고 가면 바깥으로 사회문제화 됩니다, 정치문제화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산업 분위기를 깨트리고 산업 평화를 깨트리고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 소모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노사 자율을 우리가 먼저 선도해야 되고 그렇다면 역시 이런 공기업 구조조정, 선진화를 너무 조직이 저항하는 정도로, 사회문제화·정치 쟁점화 하는 정도로까지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필요한데요, 경찰청장 중에서도 가장 강직한 경찰청장으로 소문나신 분이 철도청장에 취임한 것부터 그 조직을 대수술 하겠다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노조가 주장하는 것 보면 역시 노조는, 이 내용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 파업하기로 했다가도 하루인가 만에 다시 현업 복귀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도, 노동부 업무보고에 보니까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의 전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필수유지사업장도 떠나지 않고 상당히 절제된 행동을 취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달이 안 되면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본 것처럼 노동자대회 참가한다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현장을 뛰쳐나가게 만드는 것은 결국 파업유도인 거예요, 그 안에서 해결 못 하도록 하고 하는 것은. 뭐 정부가 그렇게 경직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노사 자율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노동부가 감독하고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일정한 레드 라인을 넘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것이지—공권력이라 한들—이것은 뭐 자율도 전혀 존중해 주지 않고요, 막바로 좀 손보겠다—조직을 좀—그렇게, 사회 분위기 조성을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역시 일이 이렇게 일파만파로 크게 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세상에 그렇게 8000명이라는 대규모 징계 사태에 대해서 우리 노동부가 ‘징계를 개별적으로 시비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돌아가겠지요’ 이런 자세는 있을 수가 없지요.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고 자체가 저는 대단히 좀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기업 선진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공기업 할 것 없이 거의 노사 간에 선진화 자체에 대한 저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런 입장의 쟁점이 노사 간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철도공사는 그동안에 강력한 노조가 이 점에 대해서 쟁점에 대한, 쟁점화를 하고 또 이것이 작년 11월 18일 날 어떤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파업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미 날짜를 못박아서 파업 투쟁지침이 시달되는 등 여러 가지 좀, 어떤 그런 쟁점화가 되던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 측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협의를 해 봐야 더 이상 절충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해서 24일 날 단협해지 통보를 하고 파업에 결국은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가급적이면 노사 자율 간에 해결하도록 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령 적극적으로, 또는 의사 표시를 한다거나 관여한다거나 하는 입장은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저희들도 잘 감안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지 경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이것이 또 다른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리고 아까 차명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가급적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취지는 우리가 법안 심의하면서 전체적으로 노사 간의 자율을 먼저 존중하고 자율의 기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떤 준칙을 정하고 그 준칙대로 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도 바로 그러한 이유로 둔 것이니까요, 또 거기에 근로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을 같이 동수로 나란히 배치했던 것도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견이 자율과 노사의 어떤 재량 속에서 단협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고 그게 안 될 때에 준칙대로 하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미리 노동법을 임의의 잣대로 해석하신다든가 하면 마치 2010년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출발의 원년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법을 해석하고 관행을 만드는 데도 그러한 비전 있는 자세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미리부터 어떤, 과거의 우려를 우리가 거기에 섞어 넣어서 아주 경직되게 한다든지 함으로써 출발부터 안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것은 서로 절제되기를 바라구요.

그래서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 또는 파견 이런 것들이 상급단체가 좋은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다 하면 거기에, 법 해석으로써 못 하게 제한한다기보다 그런 방향으로 계도하고 유도하는 것도 우리 노동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박대해 위원님이신가요, 민주노총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위원 파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가 초창기부터, 출발부터 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인내하시면서 계속 참여를 독려해 주시면…… 아마 최근 조직 대표단 구성 문제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노동현안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파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고민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한번 더 독려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노조 관련해서는, 장관님!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委員長 秋美愛**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후에 노동부가 반려 사유를 대셨지요, 몇 가지? 제가 보니까 해직자의 조합원 여부 소명 부족하다인데 해직자는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다음에 규약 내용 중 일부 문제, 어떤 정치행위 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삭제토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상당히 하고 있고 하려고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성실하게 대화 좀 하시고 교섭에 임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사용자단체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업 노사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좋은 모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서는 공무원노조가 어느 정도 성실한 자세로 따라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대화를 좀 해 보시고, 그런 신고필증 같은 것은 거기에 부합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대로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새해 들어서 G20 정상회의도 열리는 그런 나라인데 법에 보호된 공무원노조도 신고필증을 안 주어 가지고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의 노사관계를 원년으로, 획기적으로 선도하려고 한다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그러한 지침을 내려서 잘 계몽하고 선도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자꾸 이렇게 조직이 변화시키고 따라오도록 함으로써 행안부나 이런 데서 어떤 공안 문제로 취급하는 분위기를 미리 차단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철도노조 문제도 긍정적으로 우리 노동부가 직접 개입해서 봐 주시면…… 저는 노동부가 결코 힘이 없는 부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 관련 있는 일에 대해서 한 발 빠지면 힘이 없는 부서가 되시고요. 영향력이 대단한 장관님이 취임하신 이래로 목소리 내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은 힘이 있는 그러한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갖겠습니다.

사실은 저한테도 많이 로드가 걸렸어요. 신고필증 교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직접 민원을 넣어서 ‘제발 장관님 만나게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개된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는 마치도록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는 이화수 위원님, 이두아 위원님, 박준선 위원님, 강성천 위원님, 박대해 위원님, 그리고 조원진 위원님으로부터 각각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노동부장관님께서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하느라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 성 천 박 대 해 박 준 선 이 두 아  
이 화 수 조 원 진 차 명 진 추 미 애

○청가 위원(1인)

조 해 진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병 길  
전 문 위 원 원 창 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이 만 의  
기 획 조 정 실 장 문 정 호  
환 경 정 책 실 장 홍 준 석  
환 경 보 건 정 책 관 오 중 극  
물 환 경 정 책 국 장 김 지 태  
상 하 수 도 정 책 관 안 문 수  
녹 색 환 경 정 책 관 이 정 섭  
자 연 보 전 국 장 정 연 만  
자 원 순 환 국 장 백 규 석  
기 후 대 기 정 책 관 윤 중 수  
대 변 인 김 진 석  
감 사 관 유 복 환  
중 앙 환 경 분 쟁 조 정 위 원 장 김 원 민  
국 립 생 물 자 원 관 장 김 중 천  
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장 김 상 일  
수 도 관 매 답 사 관 리 공 사 사 장 조 춘 구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박 승 환  
국 립 공 원 관 리 공 단 이 사 장 엄 흥 우  
국 립 환 경 인 력 개 발 원 장 이 필 재

노동부

장 관 임 태 회  
차 관 정 중 수  
기 획 조 정 실 장 이 채 필  
고 용 정 책 실 장 신 영 철  
근 로 기 준 국 정 책 관 정 현 옥  
노 사 협 력 정 책 관 전 운 배  
정 책 기 획 관 조 병 기  
국 제 협 력 관 한 창 훈  
직 업 능 력 정 책 관 임 서 정  
고 용 평 등 정 책 관 권 영 순  
고 용 서 비 스 정 책 관 장 의 성  
대 변 인 박 중 길  
감 사 관 정 철 균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김 윤 배  
노동시장정책관 이 재 갑  
인력수급정책관 임 무 송  
공공노사정책관 이 성 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 대 모  
중앙노동위원장 이 원 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 원 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 민 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김 선 규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허 병 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 운 기  
한국고용정보원장 정 인 수  
청 장 전 병 성  
기상선진화추진단장 Kenneth C. Crawford  
기 획 조 정 관 이 일 수  
예 보 국 장 진 기 범  
관 측 기 반 국 장 엄 원 근  
기 후 과 학 국 장 박 정 규  
기 상 산 업 정 보 화 국 장 박 광 준  
수 치 모 델 관 리 관 조 주 영  
지 진 관 리 관 이 현  
국 립 기 상 연 구 소 장 조 하 만  
국 가 기 상 위 성 센 터 장 서 애 숙  
한 국 기 상 산 업 진 흥 원 장 김 병 선